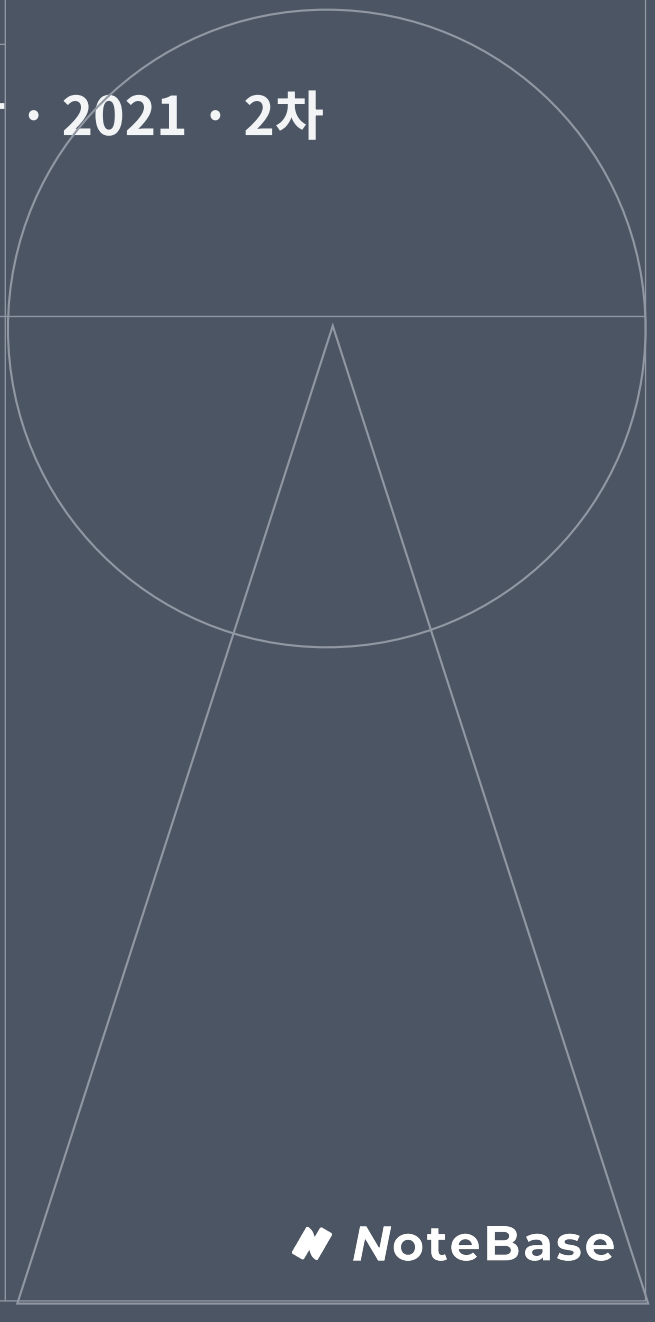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가직/7급 · 경제학 · 2021 · 2차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가직/7급 · 경제학 · 2021 · 2차

공무원/국가직/7급 · 경제학 · 2021 · 2차

문 1. 어떤 재화 시장에서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수요곡선은 우하향하며, 공급곡선은 우상향한다)

① 소비자잉여는 실제로 지불한 금액이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대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이다.

② 소비자잉여는 소비자가 재화의 소비에서 얻는 편익의 총합과 같다.

③ 고정비용이 없는 장기에 생산자잉여는 기업의 이윤과 같다.

④ 기업에 단위당 T원의 물품세를 부과하면 가격이 상승하여 생산자잉여가 증가한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의 정의를 정확히 구분하고, 고정비용이 없는 장기에서 생산자잉여와 이윤의 관계, 그리고 물품세 부과가 생산자잉여에 미치는 효과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소비자잉여는 소비자가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대 금액에서 실제로 지불한 금액을 뺀 부분이다. 즉 CS = 지불용의 - 실제 지불액이며, 수요곡선 아래 가격선 위의 면적으로 나타난다. 생산자잉여는 실제로 받은 금액에서 공급하기 위해 최소로 받아야 하는 금액(한계비용)을 뺀 부분이다. 즉 PS = 실제 판매수입 - 총가변비용이며, 가격선 아래 공급곡선 위의 면적으로 나타난다. 이윤은 총수입에서 총비용(고정비용+가변비용)을 뺀 것이므로, 고정비용이 0이면 총비용이 곧 총가변비용이 되어 이윤과 생산자잉여가 같아진다. 단위당 T원의 물품세를 생산자에게 부과하면 공급곡선이 위로 T원만큼 이동하여 시장가격은 상승하지만, 생산자가 실제로 손에 쥐는 가격(세후 가격)은 오히려 하락하므로 생산자잉여는 감소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소비자잉여는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대 금액에서 실제로 지불한 금액을 뺀 부분이다. 선지는 이를 거꾸로 서술하여 실제 지불액이 지불용의 최대금액을 초과하는 것처럼 표현했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틀린 표현 → 올바른 표현: "실제 지불 금액이 최대 지불용의를 초과하는 부분" → "최대 지불용의가 실제 지불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
② X: 소비자잉여는 소비에서 얻는 편익의 총합이 아니라, 편익의 총합에서 실제로 지불한 금액을 뺀 순편익이다. 편익의 총합 자체는 소비자잉여가 아니라 소비자가 얻는 총효용(총지불용의)에 해당한다. 틀린 표현 → 올바른 표현: "편익의 총합과 같다" → "편익의 총합에서 실제 지불액을 뺀 값과 같다".
③ O: 생산자잉여는 총수입에서 총가변비용을 뺀 값이다. 고정비용이 없는 장기에는 총비용이 총가변비용과 같아지므로,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뺀 이윤과 총수입에서 총가변비용을 뺀 생산자잉여가 정확히 일치한다.
④ X: 기업에 단위당 T원의 물품세를 부과하면 공급곡선이 위로 이동하여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은 상승하지만, 생산자가 세금을 낸 후 실제로 받는 가격은 종전보다 낮아진다. 생산자가 받는 가격이 하락하고 거래량도 줄어들므로 생산자잉여는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감소한다. 틀린 표현 → 올바른 표현: "생산자잉여가 증가한다" → "생산자잉여가 감소한다".

오답 포인트

①과 ②는 소비자잉여를 '총액' 개념으로 착각하기 쉽다는 점을 이용한 오답이다. 소비자잉여는 항상 지불용의와 실제 지불액의 '차이'이지, 지불액이나 편익의 절대적인 크기 자체가 아니다. ④는 물품세 부과 시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상승)과 생산자가 실제로 수취하는 가격(하락)을 혼동하면 틀리기 쉬운 선지이다. 세금이 부과되면 두 가격 사이에 세액만큼의 괴리(wedge)가 생긴다는 점을 놓치면 생산자잉여가 증가한다고 잘못 판단하게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소비자잉여·생산자잉여가 나오면 항상 '차이(순편익)' 개념인지부터 확인한다. 고정비용이 없는 장기 여부가 언급되면 곧바로 이윤=생산자잉여 등식이 성립하는지를 떠올린다. 물품세·보조금 문제에서는 소비자가 내는 가격과 생산자가 받는 가격을 분리해서, 어느 쪽이 상승하고 어느 쪽이 하락하는지를 따로 그려본다.

암기 포인트

소비자잉여 = 최대 지불용의 − 실제 지불액. 생산자잉여 = 실제 판매수입 − 총가변비용. 고정비용 0이면 생산자잉여 = 이윤. 물품세 부과 시 소비자가격은 상승, 생산자 수취가격은 하락 → 생산자잉여는 감소.

NoteBase

문 2.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중고차 시장에서 불량품(lemon)만 남게 되는 현상은 도덕적 해이의 사례이다.

② 유인설계(incentive design)는 대리인의 감추어진 행동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다.

③ 강제적인 단체보험 프로그램의 도입은 본인-대리인 문제(principal-agent problem)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다.

④ 자동차 보험 가입 후 운전을 더 부주의하게 하는 것은 역선택의 사례이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정보의 비대칭성은 거래 이전에 상대방의 특성(유형)을 알 수 없어 생기는 역선택(adverse selection)과, 거래 이후에 상대방의 행동을 관찰할 수 없어 생기는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로 나뉜다. 이 문제는 각 사례와 그 해결 수단을 서로 바꿔치기한 선지 중에서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을 고르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역선택은 거래 전 감추어진 특성(hidden characteristic)이 문제이며, 중고차 시장의 레몬 문제·보험 가입 전 고위험자만 몰리는 현상이 대표적 사례이다. 해결 수단으로는 신호발송(signaling)·선별(screening)·강제적인 단체보험(가입자 유형을 섞어 위험군 분리를 막는 방법) 등이 있다. 도덕적 해이는 거래 후 감추어진 행동(hidden action)이 문제이며, 보험 가입 후 주의를 덜 기울이는 행동이 대표적 사례이다. 해결 수단으로는 유인설계(incentive design), 즉 대리인의 노력이나 행동을 이끌어내도록 보상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있다(성과급, 공동보험, 자기부담금 등).

선지별 해설

① 중고차 시장에서 불량품만 남는 레몬 현상은 거래 이전에 품질(유형)을 알 수 없어 생기는 문제이므로 역선택의 사례이다. → 틀린 표현(도덕적 해이) → 올바른 표현(역선택)

② 유인설계는 본인(principal)이 대리인(agent)의 감추어진 행동, 즉 도덕적 해이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성과에 연동한 보상 구조를 설계하는 수단이다. 감추어진 행동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설명은 정확하다.

③ 강제적인 단체보험 프로그램은 가입자가 스스로 보험을 선택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고위험자만 가입하는 역선택을 막기 위한 수단이다. 본인-대리인 문제(도덕적 해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 → 틀린 표현(본인-대리인 문제 해결 수단) → 올바른 표현(역선택 해결 수단)

④ 자동차 보험 가입 후 운전을 부주의하게 하는 것은 계약 체결 이후 감추어진 행동이 문제가 되는 현상이므로 도덕적 해이의 사례이다. → 틀린 표현(역선택) → 올바른 표현(도덕적 해이)

NoteBase

오답 포인트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를 가르는 기준은 문제가 되는 시점이다. 거래 전 상대방의 유형(특성)을 몰라서 생기면 역선택, 거래 후 상대방의 행동을 관찰할 수 없어서 생기면 도덕적 해이이다. 레몬 문제와 단체보험은 역선택 쪽 사례·해결책이고, 부주의한 운전과 유인설계는 도덕적 해이 쪽 사례·해결책이라는 짝을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선지에서 '~후'나 '~이후'라는 표현이 있으면 도덕적 해이 쪽, 계약 이전 유형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면 역선택 쪽으로 먼저 분류한 다음, 제시된 해결 수단(신호발송·선별·단체보험은 역선택용, 유인설계·성과보상은 도덕적 해이용)이 그 분류와 맞는지 대조한다.

암기 포인트

역선택=거래 전 감추어진 특성(레몬 문제, 강제 단체보험으로 해결), 도덕적 해이=거래 후 감추어진 행동(부주의한 운전, 유인설계로 해결)로 짝지어 암기한다.

NoteBase

문 3. 경제성장 및 경기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내총생산이 장기추세치보다 더 큰 값을 가질 때 경제는 호황기에 있다.

② 국내총생산의 단기적 동향을 경기변동이라 하고 장기적 추세를 경제성장이라고 한다.

③ 국내총생산이 늘어나는 시기에 실업률이 줄어들고 국내총생산이 줄어드는 시기에 실업률이 늘어나는 양상을 공행성의 예라 할 수 있다.

④ 어떤 변수가 일정한 시차를 갖고 다른 변수보다 선행(leading)하거나 후행(lagging)하는 경우 두 변수 사이에 공행성이 없다고 말한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경기변동론의 기본 개념인 추세와 순환의 구분, 그리고 경기변동 지표를 분류하는 세 가지 기준(방향성·시간성·공행성)을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특히 공행성(co-movement)이라는 개념이 무엇을 뜻하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핵심 개념

국내총생산과 같은 거시경제변수는 장기추세와 단기변동으로 나뉜다. 실제 국내총생산이 장기추세치보다 크면 경기는 확장국면(호황), 작으면 수축국면(불황)에 있다고 본다. 국내총생산의 단기적 등락 자체를 경기변동이라 하고, 그 장기적 흐름을 경제성장이라 한다. 경기변동 지표는 세 기준으로 분류된다. 첫째 방향성 기준으로, 기준 경제변수(대개 국내총생산)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 경기순응적, 반대 방향이면 경기역행적, 뚜렷한 관계가 없으면 경기중립적이라 한다. 둘째 시간성 기준으로, 기준 변수보다 먼저 움직이면 선행지표, 함께 움직이면 동행지표, 나중에 움직이면 후행지표라 한다. 셋째 공행성이란 어떤 변수가 경기 국면과 체계적으로 같이 움직이는 정도, 즉 다른 변수와의 상관관계가 얼마나 뚜렷한지를 나타내는 개념이다. 공행성은 선행·동행·후행이라는 시차 유무와는 별개의 기준이며, 시차를 두고 선행하거나 후행하는 변수라도 그 상관관계가 뚜렷하다면 공행성이 있다고 말한다. 즉 선행·후행 관계의 존재가 곧 공행성의 부재를 의미하지 않는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실제 국내총생산이 장기추세치를 웃돌면 경제가 확장국면, 즉 호황기에 있다는 설명은 경기변동의 정의에 부합하는 옳은 내용이다.
② 국내총생산의 단기적 동향을 경기변동, 장기적 추세를 경제성장이라 부르는 것은 경기변동과 경제성장의 표준적 구분과 일치하는 옳은 내용이다.
③ 국내총생산 증가기에 실업률이 하락하고 국내총생산 감소기에 실업률이 상승하는 것은 국내총생산과 실업률이 반대 방향으로 뚜렷하게 함께 움직이는 관계이므로 공행성의 예로 옳게 설명한 내용이다(경기역행적이면서 공행성이 큰 지표의 예).
④ 어떤 변수가 시차를 두고 다른 변수보다 선행하거나 후행한다는 것은 시간성 기준에 따른 분류일 뿐이며, 이는 두 변수 사이에 공행성이 있는지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이다. 오히려 선행지표나 후행지표는 시차를 두고 기준 변수와 체계적으로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선행·후행 관계로 식별되는 것이므로, 그 자체로 공행성이 존재함을 보여 준다. 따라서 선행·후행 관계가 있으면 공행성이 없다고 말한다는 설명은 틀린 표현이며, 올바른 표현은 선행·후행 관계와 공행성 유무는 별개의 기준이고 시차를 둔 선행·후행 관계도 공행성의 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오답 포인트

공행성을 동행성, 즉 시차 없이 동시에 움직이는 관계로 좁게 오해하면 ④를 옳은 설명으로 착각하기 쉽다. 그러나 공행성은 방향성·시간성과 함께 경기변동 지표를 분류하는 별도의 축이며, 선행지표와 후행지표도 얼마든지 공행성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방향성(경기순응적·역행적·중립적), 시간성(선행·동행·후행), 공행성(상관관계의 뚜렷함 정도)이라는 세 기준을 서로 혼동하지 않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경기변동 지표 분류 문제가 나오면 먼저 방향성·시간성·공행성이라는 세 기준을 떠올리고, 선지에서 어떤 기준을 설명하고 있는지 구분한다. '선행/동행/후행'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시간성 기준이고, 이는 공행성 유무와 직접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준으로 삼아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경기변동 지표 분류 3기준: 방향성(경기순응적·역행적·중립적), 시간성(선행·동행·후행), 공행성(상관관계의 뚜렷한 정도). 선행·후행 관계는 공행성의 부재가 아니라 시차를 둔 공행성의 한 형태로 이해한다.

NoteBase

문 4. 물가 변동이 없는 단기 거시균형에서 다음의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조합 중 실질 이자율을 높이는 것은? (단, 실질 이자율에 미치는 각각의 정책적 효과의 크기는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①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영한다.

② 통화정책은 확장적으로 재정정책은 긴축적으로 운영한다.

③ 통화정책은 긴축적으로 재정정책은 확장적으로 운영한다.

④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긴축적으로 운영한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IS-LM 모형에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실질 이자율에 미치는 방향을 정확히 구분하고, 두 정책을 동시에 사용할 때 실질 이자율의 순효과가 확정적으로 같은 방향인지 아니면 상쇄되어 불확실한지를 판단하는 문제이다. 물가 변동이 없는 단기이므로 명목 이자율과 실질 이자율의 변화 방향은 같다.

핵심 개념

확장적 재정정책(정부지출 증가·조세 감소)은 IS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켜 실질 이자율을 높인다. 긴축적 재정정책은 IS곡선을 왼쪽으로 이동시켜 실질 이자율을 낮춘다. 확장적 통화정책(통화량 증가)은 LM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켜 실질 이자율을 낮춘다. 긴축적 통화정책(통화량 감소)은 LM곡선을 왼쪽으로 이동시켜 실질 이자율을 높인다. 즉 재정 확장과 통화 긴축은 둘 다 이자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재정 긴축과 통화 확장은 둘 다 이자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두 정책이 이자율에 대해 서로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면 그 조합의 순효과는 방향이 확정되고,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면 두 정책의 효과 크기가 같다는 가정 아래 순효과가 상쇄되어 이자율 변화 방향이 확정되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①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영한다. → 확장적 재정정책은 이자율을 높이지만 확장적 통화정책은 이자율을 낮추므로 두 효과가 반대 방향이다. 크기가 동일하다고 가정했으므로 순효과는 상쇄되어 이자율이 오른다고 단정할 수 없다. X

② 통화정책은 확장적으로 재정정책은 긴축적으로 운영한다. → 확장적 통화정책과 긴축적 재정정책은 둘 다 이자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실질 이자율은 오히려 낮아지므로 높이는 조합이 아니다. X

③ 통화정책은 긴축적으로 재정정책은 확장적으로 운영한다. → 긴축적 통화정책은 이자율을 높이고 확장적 재정정책도 이자율을 높인다. 두 정책이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므로 크기가 같다는 가정과 무관하게 실질 이자율은 반드시 상승한다. O

④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긴축적으로 운영한다. → 긴축적 통화정책은 이자율을 높이지만 긴축적 재정정책은 이자율을 낮추므로 두 효과가 반대 방향이다. 크기가 동일하다는 가정 아래 순효과가 상쇄되어 이자율이 오른다고 단정할 수 없다. X

NoteBase

오답 포인트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같은 방향(둘 다 확장 또는 둘 다 긴축)으로 섞어서 운영하면 이자율에 대한 두 효과가 서로 반대이기 때문에 순효과가 상쇄되어 방향이 확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놓치기 쉽다. 특히 ①번처럼 두 정책이 모두 '확장적'이라는 표현만 보고 경기부양이니 이자율도 오를 것이라고 성급하게 판단하면 안 된다. 이자율에 대한 효과는 정책의 확장·긴축 여부가 아니라 IS곡선과 LM곡선 중 어느 것을 움직이는지, 그리고 그 이동 방향이 서로 같은 쪽인지 반대쪽인지로 판단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동시에 나오면 먼저 각 정책이 IS곡선과 LM곡선 중 어느 것을 어느 방향으로 이동시키는지 표시한다. 다음으로 재정 확장·통화 긴축은 이자율 상승 방향, 재정 긴축·통화 확장은 이자율 하락 방향으로 서로 일치함을 확인한다. 나머지 두 조합(재정·통화가 같은 방향인 경우)은 이자율에 대해 서로 반대 효과를 내므로, 크기가 같다는 조건이 주어지면 순효과가 상쇄되어 방향을 확정할 수 없다는 점을 우선 걸러낸다.

암기 포인트

재정 확장 = 이자율 상승, 재정 긴축 = 이자율 하락, 통화 확장 = 이자율 하락, 통화 긴축 = 이자율 상승. 재정과 통화의 확장·긴축이 서로 다르면(하나는 확장, 하나는 긴축) 이자율에 대한 효과가 같은 방향으로 겹쳐 순효과가 확정된다. 재정과 통화의 확장·긴축이 서로 같으면(둘 다 확장 또는 둘 다 긴축) 이자율에 대한 효과가 반대 방향으로 겹쳐 크기가 같을 때 상쇄된다.

NoteBase

문 5. 동종 산업 내에서 수출과 수입이 동시에 나타나는 무역을 산업내 무역(intra-industry trade)이라고 한다. 이러한 형태의 무역이 발생하는 원인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비교우위
ㄴ. 규모의 경제
ㄷ. 제품 차별화
ㄹ. 상이한 부존자원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산업내무역(intra-industry trade)이 발생하는 원인을 산업간무역(inter-industry trade)의 발생 원인과 구분해서 아는지 묻는다. ㄱ~ㄹ 네 가지 항목 중 산업내무역의 발생 원인에 해당하는 것만 골라내는 형태다.

핵심 개념

산업간무역은 국가 간 비교우위 차이에서 비롯되며, 이 비교우위 차이는 각국의 부존자원(생산요소 부존량)이 서로 다르다는 헥셔-오린 모형의 설명으로 뒷받침된다. 즉 비교우위와 상이한 부존자원은 서로 다른 산업(예: 한 나라는 옷을, 다른 나라는 기계를 수출)이 교환되는 산업간무역을 설명하는 원인이다. 반면 산업내무역은 같은 산업 내에서 유사한 제품이 서로 수출·수입되는 현상으로, 규모의 경제(대량생산에 따른 평균비용 하락)와 제품 차별화(같은 산업 내에서도 소비자마다 다른 브랜드·사양을 선호)가 결합할 때 발생한다. 예를 들어 자국에서도 특정 사양의 자동차를 특화 생산해 수출하면서, 동시에 다른 사양·브랜드의 자동차를 수입하는 것이 산업내무역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ㄱ. 비교우위 → X. 비교우위는 서로 다른 산업 간 무역, 즉 산업간무역을 설명하는 원인이며 산업내무역의 원인이 아니다.
ㄴ. 규모의 경제 → O. 기업이 한 가지 제품 라인에 특화해 생산 규모를 키우면 평균비용이 낮아지고, 이렇게 특화 생산된 유사 제품들이 국가 간에 서로 거래되면서 같은 산업 내 무역이 발생한다.
ㄷ. 제품 차별화 → O. 같은 산업 내에서도 제품의 브랜드·품질·사양이 다르면 소비자의 다양한 선호를 충족하기 위해 유사 제품을 서로 수출하고 수입하게 되므로 산업내무역의 원인이 된다.
ㄹ. 상이한 부존자원 → X. 부존자원의 차이는 헥셔-오린 모형에서 비교우위의 원천으로, 이 역시 산업간무역을 설명하는 원인이지 산업내무역의 원인이 아니다.
따라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ㄴ, ㄷ이므로 ①(ㄱ,ㄴ), ②(ㄱ,ㄷ), ④(ㄴ,ㄹ)는 모두 비교우위 또는 부존자원을 포함하고 있어 틀리고, ③(ㄴ,ㄷ)이 옳다.

오답 포인트

비교우위와 부존자원 차이는 '왜 서로 다른 산업의 상품을 교환하는가'를 설명하는 산업간무역의 원인이라는 점에서 산업내무역의 원인과 혼동하기 쉽다. 산업내무역은 오히려 국가 간 부존자원이나 기술 수준이 비슷한 선진국들 사이에서 활발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점을 함께 기억해 둔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발문에서 묻는 것이 '산업내무역'인지 '산업간무역'인지부터 확정한다. 비교우위·부존자원 차이가 보이면 산업간무역 쪽 원인이므로 산업내무역 문제에서는 제외하고, 규모의 경제·제품 차별화가 보이면 산업내무역 쪽 원인으로 채택한다.

암기 포인트

산업간무역=비교우위·부존자원 차이(헥셔-오린), 산업내무역=규모의 경제·제품 차별화(신무역이론)로 짝지어 외워 둔다.

NoteBase

문 6. 다음 상황에서 기업 A가 선택하는 기본요금과 단위당 사용료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독점기업 A의 비용함수는 $C(Q) = 20Q$이고 개별 소비자의 수요함수는 모두 동일하게 $Q = 100 - P$(Q: 수량, P: 가격)이다. 이 기업은 이부가격제(two-part tariff)를 이용해 이윤을 극대화하려고 한다.

① 기본요금: 2,250, 단위당 사용료: 60

② 기본요금: 2,800, 단위당 사용료: 60

③ 기본요금: 3,000, 단위당 사용료: 20

④ 기본요금: 3,200, 단위당 사용료: 20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동일한 소비자로 구성된 독점기업이 이부가격제(two-part tariff)를 통해 이윤을 극대화할 때, 단위당 사용료(종량요금)와 기본요금(가입비)을 각각 어떻게 정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모든 소비자의 수요함수가 동일하므로 완전한 이윤극대화가 가능한 표준적인 이부가격제 상황이다.

조건 정리

비용함수는 $C(Q) = 20Q$이므로 한계비용은 $MC = 20$이고 고정비용은 0이다. 개별 소비자의 수요함수는 $Q = 100 - P$로 모두 동일하다.

사용할 공식

소비자가 동질적일 때 이부가격제의 이윤극대화 조건은 다음과 같다. 단위당 사용료(종량요금) p는 한계비용과 같게 설정한다: $p = MC$. 기본요금(가입비) T는 그 가격 수준에서 개별 소비자가 얻는 소비자잉여 전부를 흡수하도록 설정한다: $T = CS(p = MC)$. 수요곡선이 직선이므로 소비자잉여는 삼각형 면적 공식 $CS = \frac{1}{2} \times Q \times (P_{\max} - p)$로 구한다.

계산 과정

먼저 단위당 사용료를 한계비용과 같게 설정한다: $p = MC = 20$.
이때 개별 소비자의 구매량은 수요함수에 대입하여 $Q = 100 - 20 = 80$이다.
수요함수 $Q = 100 - P$에서 수요곡선의 세로절편(최대지불용의가격)은 $P_{\max} = 100$이므로, 개별 소비자의 소비자잉여는 $CS = \frac{1}{2} \times 80 \times (100 - 20) = \frac{1}{2} \times 80 \times 80 = 3{,}200$이다.
따라서 기업 A는 이 소비자잉여 전부를 기본요금으로 부과하여 $T = 3{,}200$으로 정한다.
결과적으로 단위당 사용료는 20, 기본요금은 3,200이다.

NoteBase

선지 판단

① 기본요금 2,250, 단위당 사용료 60 → X: 단위당 사용료를 한계비용보다 높게 책정하면 판매량이 한계비용 가격 수준보다 줄어들어(예: $Q = 100 - 60 = 40$) 종량요금에서 남기는 이윤이 생기지만, 기본요금으로 흡수할 수 있는 소비자잉여가 그만큼 작아져($\frac{1}{2} \times 40 \times 40 = 800$) 총이윤이 최적 조합보다 작아진다. 계산된 기본요금 값도 일치하지 않는다.
② 기본요금 2,800, 단위당 사용료 60 → X: ①과 같은 이유로 단위당 사용료가 한계비용(20)보다 높아 최적이 아니며, 제시된 기본요금 액수도 계산 결과와 다르다.
③ 기본요금 3,000, 단위당 사용료 20 → X: 단위당 사용료는 한계비용과 같게 20으로 맞게 설정되었으나, 기본요금이 실제 소비자잉여인 3,200보다 작은 3,000이어서 기업이 흡수할 수 있는 잉여를 전부 가져가지 못한 값이다.
④ 기본요금 3,200, 단위당 사용료 20 → O: 단위당 사용료를 한계비용 20으로 설정하고, 그 가격에서의 개별 소비자잉여 3,200을 기본요금으로 전부 부과하는 조합으로 이윤극대화 조건과 정확히 일치한다.

오답 포인트

이 유형의 대표적인 함정은 단위당 사용료를 한계비용보다 높게(또는 낮게) 설정한 뒤 기본요금을 어림잡아 계산하는 것이다. 소비자가 모두 동질적인 경우 단위당 사용료는 반드시 한계비용과 일치시켜야 총잉여(따라서 기업이 가져갈 수 있는 몫)가 최대가 되고, 기본요금은 그 가격에서의 소비자잉여를 정확히 삼각형 공식으로 계산해야 한다. 수요곡선의 세로절편(가격이 0일 때가 아니라 수량이 0일 때의 가격)을 잘못 잡아 삼각형 밑변·높이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소비자가 동질적이라는 조건을 확인하면 곧바로 단위당 사용료=한계비용으로 고정한다. 이후 그 가격을 수요함수에 대입해 거래량을 구하고, 수요곡선의 세로절편과 한계비용의 차이를 높이로, 거래량을 밑변으로 하는 삼각형 면적을 계산해 기본요금으로 삼는다. 선지 중 단위당 사용료가 한계비용과 다른 값을 제시하는 것은 먼저 소거하고, 남은 선지 중 기본요금이 계산된 소비자잉여와 정확히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동질적 소비자 이부가격제: 단위당 사용료=한계비용, 기본요금=그 가격에서의 개별 소비자잉여(수요곡선이 직선이면 (1)/(2)×거래량×(수요곡선 절편-한계비용)).

NoteBase

문 7. 수익률곡선(yield curve)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만기 외에 다른 조건이 동일한 채권의 만기와 이자율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곡선이다.

② 이자율의 기간구조에 대한 분할시장이론(segmented markets theory)은 단기채권과 장기채권의 이자율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이유를 설명해 준다.

③ 이자율의 기간구조에 대한 유동성 프리미엄 이론(liquidity premium theory)은 수익률곡선이 전형적으로 우상향하는 이유를 설명해 준다.

④ 이자율의 기간구조에 대한 기대이론(expectations theory)에 따르면, 중앙은행이 앞으로 계속 단기이자율을 낮추겠다는 공약을 할 경우 장기이자율은 하락해야 한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수익률곡선의 정의와 이자율 기간구조를 설명하는 세 가지 이론(분할시장이론·유동성 프리미엄 이론·기대이론)이 각각 어떤 현상을 설명하는지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특히 각 이론이 설명하는 대상(단기·장기 이자율의 동행성, 곡선의 우상향 경향, 미래 정책에 대한 곡선의 반응)을 이론별로 짝지어야 한다.

핵심 개념

수익률곡선=만기 외 조건이 동일한 채권에서 만기와 이자율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 곡선. 기대이론=장기이자율은 현재와 미래에 예상되는 단기이자율들의 평균으로 결정된다고 보며, 단기·장기 이자율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이유와 수익률곡선의 기울기가 미래 단기이자율 예상에 따라 달라지는 이유를 설명한다.
분할시장이론=단기채권시장과 장기채권시장이 서로 분리되어 있어 각 시장의 수요·공급으로 이자율이 독립적으로 결정된다고 보는 이론으로, 수익률곡선이 우상향할 때가 많은 이유는 설명하지만 단기·장기 이자율의 동행성은 설명하지 못한다. 유동성 프리미엄 이론=기대이론에 만기가 길수록 커지는 유동성(기간) 프리미엄을 더한 이론으로, 수익률곡선이 전형적으로 우상향하는 이유를 설명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수익률곡선은 만기 외의 다른 조건(신용위험, 세금 등)이 동일한 채권을 전제로, 만기와 이자율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곡선이라는 정의 그대로이다.
② X: 분할시장이론은 단기채권시장과 장기채권시장을 서로 독립된 시장으로 보아 각 시장의 수요와 공급만으로 이자율이 정해진다고 설명하는 이론이다. 따라서 단기이자율과 장기이자율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현상(동행성)은 오히려 기대이론이 설명하는 내용이며, 분할시장이론은 이를 설명하지 못한다. → 틀린 표현 '분할시장이론은 단기·장기 이자율의 동행성을 설명해 준다' → 올바른 표현 '단기·장기 이자율의 동행성은 기대이론이 설명하며, 분할시장이론은 이를 설명하지 못한다'.
③ O: 유동성 프리미엄 이론은 만기가 길어질수록 위험(유동성 프리미엄)이 커진다고 보아 기대이론에 양(+)의 프리미엄을 더하므로, 수익률곡선이 평상시 우상향하는 경향을 잘 설명해 준다.
④ O: 기대이론에 따르면 장기이자율은 현재와 향후 예상되는 단기이자율들의 평균이므로, 중앙은행이 앞으로 계속 단기이자율을 낮추겠다고 공약하면 미래에 예상되는 단기이자율들의 평균이 낮아져 장기이자율도 하락해야 한다.

오답 포인트

분할시장이론과 기대이론이 설명하는 대상을 뒤바꿔 서술하는 함정에 유의한다. 분할시장이론은 '수익률곡선이 우상향하는 경우가 많은 이유'(장기채권 공급이 상대적으로 많거나 수요가 적을 수 있다는 시장 특성)를 설명할 수 있을 뿐, 단기·장기 이자율의 동행성은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이 핵심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이자율 기간구조 이론 문제는 먼저 선지에 언급된 이론명(분할시장이론/유동성 프리미엄 이론/기대이론)을 확인한 뒤, 그 이론이 실제로 설명하는 현상(동행성, 우상향 경향, 정책 공약에 대한 장기이자율 반응)과 선지의 서술이 서로 맞게 짝지어졌는지를 대조해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동행성(단기·장기 이자율이 같이 움직임)=기대이론, 우상향 경향=유동성 프리미엄 이론, 다양한 형태(우상향뿐 아니라 우하향 등)의 존재=분할시장이론(시장 분리로 설명) 이렇게 이론별 설명 대상을 짝지어 암기해 둔다.

NoteBase

문 8. 효율임금이론(efficiency wage theory)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효율임금이론은 임금의 하방경직성을 설명할 수 있다.

② 효율임금은 근로자의 도덕적 해이를 완화시킬 수 있다.

③ 효율임금은 근로자의 이직을 감소시킬 수 있다.

④ 효율임금은 노동의 공급과잉을 해소시킬 수 있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효율임금이론이 시장균형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하는 이유와 그로 인해 나타나는 결과를 정확히 구분하는 문제이다. 효율임금이론은 균형임금보다 높은 임금이 오히려 기업의 생산성과 비용 측면에서 합리적일 수 있음을 설명하는 이론이며, 그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과 그 현상이 '해소'되는지 '지속'되는지를 혼동하면 안 된다.

핵심 개념

효율임금이론은 근로자의 생산성이 임금 수준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보아, 기업이 시장균형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근로의욕과 생산성을 높이려 한다는 이론이다. 높은 임금은 근로자가 해고를 두려워하게 만들어 태만(도덕적 해이)을 줄이고, 이직을 억제하며, 우수한 인력을 유인·선별하는 효과를 낸다. 그런데 모든 기업이 균형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하면 노동수요량이 균형 수준보다 줄어드는 반면 노동공급량은 늘어나, 노동시장에는 비자발적 실업, 즉 노동의 공급과잉(초과공급) 상태가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임금이 하락하면 이 초과공급이 해소되어야 하지만, 효율임금 수준에서 임금이 아래로 내려가지 않으므로(임금의 하방경직성) 초과공급은 해소되지 않고 계속 유지된다.

선지별 해설

① 효율임금이론은 기업이 근로자의 생산성 유지를 위해 임금을 시장균형임금 아래로 낮추지 않으려 하므로 임금의 하방경직성을 설명하는 대표적 이론이다. 옳은 설명이다.
② 임금이 높아지면 근로자는 해고당할 경우 잃는 것이 커지므로 태만하지 않고 성실히 근무하려는 유인이 생긴다. 이는 근로자의 도덕적 해이(태만)를 완화시키는 효과이다. 옳은 설명이다.
③ 높은 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다른 직장으로 옮길 유인이 줄어들므로 효율임금은 근로자의 이직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옳은 설명이다.
④ 효율임금은 시장균형임금보다 높게 설정되어 노동수요량은 줄고 노동공급량은 늘어나므로 노동의 공급과잉(비자발적 실업)을 오히려 발생시키고 지속시킨다. '해소시킨다'는 표현은 틀린 표현이며, 올바른 표현은 '노동의 공급과잉(비자발적 실업)을 유발·지속시킨다'이다. 틀린 설명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효율임금이 근로자 개인 차원에서 주는 긍정적 효과(도덕적 해이 완화, 이직 감소, 생산성 향상)와 노동시장 전체 차원에서 나타나는 결과(비자발적 실업, 즉 노동 공급과잉의 지속)를 뒤섞어 생각하면 ④를 옳은 설명으로 착각하기 쉽다. 효율임금은 개별 근로자의 행동을 개선시키지만, 시장 전체로는 초과공급(실업)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만들어 내고 그 상태를 지속시킨다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효율임금이론 문제에서는 먼저 '임금의 하방경직성', '도덕적 해이(태만) 완화', '이직 감소', '생산성 향상'은 효율임금이 주는 긍정적 효과로 분류하고, '노동의 초과공급(비자발적 실업)의 발생과 지속'은 그 부작용으로 분류한다. 선지에 '해소', '제거', '균형 회복' 같은 표현이 나오면 효율임금이론의 결론과 반대이므로 옳지 않은 선지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효율임금 → 개인에게는 좋음(태만↓, 이직↓, 생산성↑), 시장 전체에는 나쁨(초과공급·실업 지속, 하방경직성 발생)으로 짝지어 기억해 둔다.

NoteBase

문 9. 효용이 극대가 되도록 두 재화 x, y를 소비하는 을의 효용함수는 $u(x,y)=2\sqrt{xy}$이다. y의 가격이 4배가 되었을 때 원래의 효용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 소득을 구하면? (단, 가격 변화 전의 소득은 60, x와 y의 가격은 각각 1이다)

① 60

② 80

③ 100

④ 120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콥-더글라스형 효용함수에서 가격이 변할 때, 원래의 효용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지출액의 변화분(보상변화, compensating variation)을 구하는 문제이다. 지출최소화 문제를 세워 새로운 가격 하에서 원래 효용을 달성하는 지출액을 구한 뒤, 원래 소득과 비교해 추가로 필요한 소득을 계산한다.

조건 정리

효용함수는 $u(x,y)=2\sqrt{xy}$이다. 가격 변화 전에는 $p_x=1, p_y=1$, 소득 $m=60$이다. 가격 변화 후에는 y의 가격이 4배가 되어 $p_x=1, p_y=4$이다. 가격 변화 후에도 가격 변화 전과 동일한 효용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 지출액을 구하고, 이를 원래 소득 60과 비교하여 추가로 필요한 소득을 구한다.

사용할 공식

효용함수 $u(x,y)=2\sqrt{xy}$에서 한계효용은 $MU_x=\sqrt{y/x}$, $MU_y=\sqrt{x/y}$이므로 한계대체율은 $MRS_{xy}=\frac{MU_x}{MU_y}=\frac{y}{x}$이다. 효용극대화(또는 지출최소화) 조건은 $MRS_{xy}=\frac{p_x}{p_y}$이며, 예산선(또는 목표효용) 조건과 연립하여 최적소비량을 구한다.

계산 과정

1) 가격 변화 전 최적소비: $MRS_{xy}=\frac{y}{x}=\frac{p_x}{p_y}=\frac{1}{1}=1$이므로 $x=y$이다. 예산제약 $x+y=60$에 대입하면 $x=y=30$이다. 이때 원래 효용수준은 $u_0=2\sqrt{30\times 30}=2\times 30=60$이다.
2) 가격 변화 후($p_y=4$) 원래 효용 $u_0=60$을 유지하는 최소지출 구하기: 조건은 $MRS_{xy}=\frac{y}{x}=\frac{p_x}{p_y}=\frac{1}{4}$이므로 $y=\frac{x}{4}$이다. 목표효용 조건 $2\sqrt{xy}=60$에서 $xy=900$이다. $y=x/4$를 대입하면 $x\cdot\frac{x}{4}=900$, 즉 $x^2=3600$이므로 $x=60$이고 $y=15$이다.
3) 새로운 가격에서 이 소비묶음을 구입하는 데 필요한 지출액은 $p_xx+p_yy=1\times 60+4\times 15=60+60=120$이다.
4) 원래 소득이 60이었으므로, 원래의 효용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추가로 필요한 소득은 $120-60=60$이다.

NoteBase

선지 판단

① 60 → O. 가격 변화 후 원래 효용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출액이 120이고 원래 소득이 60이므로, 추가로 필요한 소득은 120-60=60이다.
② 80 → X. 지출 증가분을 잘못 계산한 값으로, 실제 필요한 추가 소득 60과 다르다.
③ 100 → X. 계산 과정에서 최적소비량이나 지출액을 잘못 구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값으로, 정확한 값이 아니다.
④ 120 → X. 이는 새로운 가격에서 원래 효용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총지출액이지 추가로 필요한 소득이 아니다. 추가 소득은 이 지출액에서 원래 소득 60을 빼야 한다.

오답 포인트

이 문제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새로운 가격에서 원래 효용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총지출액(120)과, 그 지출액을 충당하기 위해 '추가로' 필요한 소득(120-60=60)을 혼동하는 것이다. 문제에서 묻는 것은 후자이므로, 반드시 원래 소득 60을 빼주어야 한다. 또한 최적소비 조건을 세울 때 $MRS_{xy} = y/x$를 x/y로 뒤바꾸어 계산하면 전혀 다른 값이 나오므로 주의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효용함수가 $u = 2\sqrt{xy}$ 또는 $u = x^{0.5}y^{0.5}$ 형태의 콥-더글라스형이면, 가격비가 1:1일 때는 두 재화를 동일한 금액으로 소비한다는 점을 이용해 원래 소비량을 빠르게 구한다. 가격이 변한 뒤에는 새로운 상대가격과 목표효용(원래 효용수준)을 이용해 새 소비묶음을 구하고, 그 지출액에서 원래 소득을 빼면 보상에 필요한 추가 소득이 된다.

암기 포인트

효용함수 $u = 2\sqrt{xy}$에서 한계대체율은 $MRS_{xy} = y/x$이며, 가격비가 1:1이면 두 재화에 소득을 절반씩 지출한다. 가격 변화 시 '동일 효용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추가 소득'을 물으면, 새로운 가격에서 원래 효용을 달성하는 총지출액을 구한 뒤 원래 소득을 빼는 것이 핵심이다.

NoteBase

문 10. A국과 B국의 거시경제모형이 각각 다음과 같을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국	B국
○ $C=20+0.8\,Y_D$	○ $C=20+0.8\,Y_D$
○ $Y_D=Y-T$	○ $Y_D=Y-T$
○ $T=30+0.25\,Y$	○ $T=30$
○ $I=40$	○ $I=40$
○ $G=50$	○ $G=50$
○ $X=M=0$	○ $X=M=0$

(단, C는 소비, Y_D는 가처분소득, Y는 국민소득, T는 조세, I는 투자, G는 정부지출, X는 수출, M은 수입을 나타내며, 측정 단위는 조 원이다)

① A국의 균형국민소득이 215조 원이라고 할 때 균형국민소득을 4%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지출을 8.6조 원 증대시키면 된다.

② B국의 균형국민소득이 430조 원이라고 할 때 균형국민소득을 4%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투자를 3.44조 원 증대시키면 된다.

③ 정부지출의 증대가 균형국민소득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는 A국과 B국이 동일하다.

④ A국의 한계세율이 증가하면 균형국민소득 역시 증가한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정액세만 있는 모형과 비례소득세가 있는 모형에서 정부지출승수·투자승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균형국민소득을 특정 비율만큼 늘리는 데 필요한 지출 증가분을 승수를 이용해 역산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문제이다. A국은 비례세($T = 30 + 0.25Y$)가 포함되어 있고 B국은 정액세($T = 30$)만 있다는 점이 두 모형의 핵심 차이이다.

NoteBase

조건 정리

두 나라 모두 $C = 20 + 0.8Y_D$, $Y_D = Y - T$, $I = 40$, $G = 50$, $X = M = 0$으로 동일하다. 차이는 조세함수뿐이다. A국은 $T = 30 + 0.25Y$로 한계세율이 0.25인 비례세이고, B국은 $T = 30$으로 소득과 무관한 정액세이다. 개방부문은 없으므로($X = M = 0$) 폐쇄경제 단순모형으로 균형국민소득 $Y = C + I + G$를 구하면 된다.

사용할 공식

균형조건 $Y = C + I + G$에 소비함수를 대입해 균형국민소득을 구한다. 정부지출승수는 $\frac{dY}{dG} = \frac{1}{1 - MPC(1-t)}$이며, 정액세만 있는 경우($t = 0$)에는 투자승수와 정부지출승수가 모두 $\frac{1}{1 - MPC}$로 같아진다. 국민소득을 k% 늘리는 데 필요한 지출 증가분은 Δ(지출)=Δ Y승수로 구한다.

계산 과정

A국: $Y_D = Y - (30 + 0.25Y) = 0.75Y - 30$이므로 $C = 20 + 0.8(0.75Y - 30) = 0.6Y - 4$. 균형조건에 대입하면 $Y = 0.6Y - 4 + 40 + 50 = 0.6Y + 86$이므로 $0.4Y = 86$, $Y = 215$(문제에 제시된 값과 일치). A국의 정부지출승수는 $\frac{1}{1 - 0.8 \times 0.75} = \frac{1}{1 - 0.6} = \frac{1}{0.4} = 2.5$이다. 균형국민소득을 4% 늘리려면 $\Delta Y = 215 \times 0.04 = 8.6$조 원이 필요하고, 이를 만들기 위한 정부지출 증가분은 $\Delta G = \frac{8.6}{2.5} = 3.44$조 원이다.

B국: $Y_D = Y - 30$이므로 $C = 20 + 0.8(Y - 30) = 0.8Y - 4$. 균형조건에 대입하면 $Y = 0.8Y - 4 + 40 + 50 = 0.8Y + 86$이므로 $0.2Y = 86$, $Y = 430$(문제에 제시된 값과 일치). B국은 정액세만 있으므로 투자승수와 정부지출승수가 같고 $\frac{1}{1 - 0.8} = 5$이다. 균형국민소득을 4% 늘리려면 $\Delta Y = 430 \times 0.04 = 17.2$조 원이 필요하고, 이를 투자 증가로 달성하려면 $\Delta I = \frac{17.2}{5} = 3.44$조 원이 필요하다.

선지 판단

① A국의 균형국민소득 215조 원을 4% 늘리려면 필요한 국민소득 증가분은 8.6조 원이지만,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부지출 증가분은 승수(2.5)로 나눈 3.44조 원이다. 8.6조 원은 국민소득 증가분이지 정부지출 증가분이 아니므로 틀린 서술이다 → X (정부지출 증가분은 8.6조 원이 아니라 3.44조 원).
② B국의 균형국민소득 430조 원을 4% 늘리려면 국민소득 증가분은 17.2조 원이고, B국은 정액세만 있어 투자승수도 5이므로 필요한 투자 증가분은 17.2/5 = 3.44조 원이다. 계산과 정확히 일치한다 → O.
③ A국의 정부지출승수는 2.5, B국의 정부지출승수는 5로 서로 다르다. 비례소득세가 있는 A국은 소득이 늘어날수록 세금도 늘어 소비 증가가 상쇄되므로 승수가 더 작다 → X (크기가 동일하지 않고 B국이 더 크다).
④ 한계세율(t)이 증가하면 승수의 분모 $1 - MPC(1 - t)$가 커져 승수가 작아지고, 동일한 지출 수준에서 균형국민소득은 오히려 감소한다 → X (증가가 아니라 감소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①은 '국민소득 증가분'과 '그 증가분을 만들기 위한 지출 증가분'을 혼동하기 쉽다. 국민소득 증가분(8.6조 원)을 그대로 정부지출 증가분으로 착각하면 틀린다. 반드시 승수로 나누어 지출 증가분을 구해야 한다. ③은 두 나라의 소비함수와 승수식 형태가 같다는 이유로 승수 크기도 같다고 오판하기 쉬운데, 조세함수의 차이(비례세 유무)가 승수를 다르게 만든다는 점을 놓치면 안 된다. ④는 세율 인상이 재정 건전성에 도움이 된다는 상식과 균형국민소득의 크기 변화를 혼동하면 틀린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비례소득세가 있는 모형과 정액세만 있는 모형이 함께 제시되면 가장 먼저 정부지출승수(또는 투자승수) 공식 $\frac{1}{1-MPC(1-t)}$에서 t값의 차이부터 비교한다. 정액세만 있으면 $t=0$이 되어 투자승수와 정부지출승수가 같아진다는 점을 이용하면 계산이 빨라진다. 'N% 증가시키기 위한 지출 증가분'을 물으면 항상 목표 국민소득 증가분을 먼저 구한 뒤 승수로 나누어야 하며, 국민소득 증가분 자체를 지출 증가분으로 답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암기 포인트

정부지출승수 = $\frac{1}{1-MPC(1-t)}$이고, 정액세만 있으면($t=0$) 투자승수와 정부지출승수가 서로 같다. 비례세가 있으면($t>0$) 승수의 분모가 커져 승수가 작아진다. 지출 증가분을 구할 때는 '목표 국민소득 증가분 ÷ 승수' 순서로 계산한다.

NoteBase

문 11. 어느 나라의 생산가능인구 중 취업자가 900만 명, 실업자가 100만 명, 비경제활동인구가 1,000만 명이라고 가정하자. 이 나라의 경제활동참가율과 실업률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① 경제활동참가율: 50%, 실업률: 5%

② 경제활동참가율: 50%, 실업률: 10%

③ 경제활동참가율: 55%, 실업률: 5%

④ 경제활동참가율: 55%, 실업률: 10%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생산가능인구를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로 나누고, 경제활동인구를 다시 취업자와 실업자로 나누는 기본 구조를 이해하는지, 그리고 경제활동참가율과 실업률의 분모가 서로 다르다는 점을 정확히 아는지를 묻는다.

조건 정리

취업자 900만 명, 실업자 100만 명, 비경제활동인구 1,000만 명이다. 경제활동인구는 취업자와 실업자의 합이므로 900만 명 + 100만 명 = 1,000만 명이다. 생산가능인구는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의 합이므로 1,000만 명 + 1,000만 명 = 2,000만 명이다.

사용할 공식

경제활동참가율 = 경제활동인구생산가능인구 × 100
실업률 = 실업자경제활동인구 × 100

계산 과정

경제활동참가율 = 1,000만2,000만 × 100 = 50\%
실업률 = 100만1,000만 × 100 = 10\%
따라서 경제활동참가율은 50%, 실업률은 10%이다.

NoteBase

선지 판단

① 경제활동참가율 50%, 실업률 5% → 경제활동참가율은 맞으나 실업률 계산이 틀렸다. 실업률의 분모는 생산가능인구가 아니라 경제활동인구(1,000만 명)이므로 100만/1,000만=10%가 되어야 한다.
② 경제활동참가율 50%, 실업률 10% → 두 값 모두 계산과 일치한다. 정답이다.
③ 경제활동참가율 55%, 실업률 5% → 경제활동참가율 계산에서 분모를 잘못 잡은 오류로, 55%는 실제 값과 맞지 않는다. 실업률도 틀렸다.
④ 경제활동참가율 55%, 실업률 10% → 실업률은 맞으나 경제활동참가율이 틀렸다. 생산가능인구 2,000만 명 중 경제활동인구는 1,000만 명이므로 50%가 되어야 한다.

오답 포인트

가장 흔한 실수는 실업률을 구할 때 분모에 생산가능인구(2,000만 명)를 넣어 5%로 계산하는 것이다. 실업률의 분모는 반드시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여야 한다. 또한 경제활동참가율의 분모에 경제활동인구만 넣거나 비경제활동인구를 빼먹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생산가능인구,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다섯 개념이 나오면 먼저 포함 관계부터 그린다. 생산가능인구 = 경제활동인구 + 비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인구 = 취업자 + 실업자 순서로 값을 채운 뒤, 경제활동참가율은 생산가능인구를 분모로,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를 분모로 쓴다는 점만 지키면 실수를 줄일 수 있다.

암기 포인트

경제활동참가율의 분모는 생산가능인구, 실업률의 분모는 경제활동인구라는 것을 짝지어 외워 둔다. 분모를 헷갈리지 않는 것이 이 유형 풀이의 핵심이다.

NoteBase

문 12. 통화량을 감소시키는 요인만을 모두 고르면? (단, 부분준비제도하의 화폐공급 모형에서 법정지급준비율과 초과지급준비율의 합이 1보다 작고,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

ㄱ. 중앙은행의 공개시장매도
ㄴ. 중앙은행의 재할인율 인상
ㄷ. 예금자의 현금통화비율 ≤ft(현금통화요구불예금) 감소
ㄹ. 시중은행의 초과지급준비율 감소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통화량 M은 본원통화 B와 통화승수 m의 곱으로 결정된다: $M = m \times B$. 이 문제는 ㄱ~ㄹ의 각 변화가 본원통화 B를 줄이는지, 아니면 통화승수 m을 늘리는지 줄이는지를 구분해 통화량의 증감 방향을 판단하는 문제이다. 특히 현금통화비율이나 초과지급준비율이 '감소'하면 통화량도 감소할 것이라고 성급히 판단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통화승수 공식에 대입해 부호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

조건 정리

현금통화비율 cr = (현금통화)/(요구불예금), 지급준비율 rr = 법정지급준비율 + 초과지급준비율이며, 문제 조건상 $rr < 1$이다.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사용할 공식

부분준비제도하의 통화승수는 $m = \frac{cr+1}{cr+rr}$ 이고, 통화량은 $M = m \times B$이다. m을 cr에 대해 미분하면 $\frac{\partial m}{\partial cr} = \frac{(cr+rr)-(cr+1)}{(cr+rr)^2} = \frac{rr-1}{(cr+rr)^2}$ 이며 $rr < 1$이므로 이 값은 항상 음수이다. 즉 cr이 감소하면 m은 오히려 증가한다. 같은 방식으로 m을 rr에 대해 미분하면 $\frac{\partial m}{\partial rr} = -\frac{cr+1}{(cr+rr)^2} < 0$ 이므로 rr이 감소하면 m은 증가한다.

NoteBase

계산 과정

ㄱ. 중앙은행이 공개시장에서 채권을 매도하면 시중 자금이 중앙은행으로 흡수되어 본원통화 B가 감소한다. m은 변화가 없으므로 $M = m \times B$가 감소한다.
ㄴ. 중앙은행이 재할인율을 인상하면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유인이 줄어 중앙은행의 대출을 통한 본원통화 공급이 감소한다. m은 변화가 없으므로 M이 감소한다.
ㄷ. 예금자의 현금통화비율 cr이 감소하면, 위에서 구한 대로 $\partial m/\partial cr < 0$이므로 통화승수 m은 오히려 증가한다. B는 불변이므로 $M = m \times B$는 증가한다.
ㄹ. 시중은행의 초과지급준비율이 감소하면 rr이 작아지고, $\partial m/\partial rr < 0$이므로 m은 증가한다. B는 불변이므로 M은 증가한다.
따라서 통화량을 감소시키는 요인은 ㄱ, ㄴ뿐이다.

선지 판단

① ㄱ, ㄴ — O. 공개시장매도와 재할인율 인상은 모두 본원통화를 줄여 통화량을 감소시킨다.
② ㄱ, ㄷ — X. ㄱ은 통화량을 감소시키지만, ㄷ(현금통화비율 감소)은 통화승수를 높여 통화량을 오히려 증가시킨다.
③ ㄴ, ㄹ — X. ㄴ은 통화량을 감소시키지만, ㄹ(초과지급준비율 감소)은 통화승수를 높여 통화량을 오히려 증가시킨다.
④ ㄷ, ㄹ — X. ㄷ과 ㄹ은 모두 통화승수를 높여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므로 감소 요인이 아니다.

오답 포인트

'현금통화비율 감소', '초과지급준비율 감소'라는 표현만 보고 직관적으로 통화량도 함께 줄어든다고 판단하면 안 된다. 통화승수 $m = (cr + 1)/(cr + rr)$에서 cr이나 rr이 작아지면 분모가 더 크게 줄어드는 구조여서 오히려 m이 커지고, 그 결과 통화량은 증가한다. 즉 ㄷ, ㄹ은 '감소'라는 단어 때문에 통화량 감소 요인으로 착각하기 쉬운 함정 선지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통화공급 관련 문제는 먼저 $M = m \times B$로 분해한 뒤, 제시된 각 요인이 본원통화 B에 영향을 주는지, 아니면 통화승수 m의 구성요소인 cr, rr에 영향을 주는지를 구분한다. cr이나 rr이 변할 때는 반드시 통화승수 공식에 대입하거나 편미분 부호를 확인해 m이 커지는지 작아지는지 판단하고, 절대 '비율이 줄었으니 통화량도 준다'는 식으로 직관적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암기 포인트

통화승수 $m = \frac{cr+1}{cr+rr}$에서 $rr < 1$일 때 $cr \downarrow \Rightarrow m \uparrow$, $rr \downarrow \Rightarrow m \uparrow$이다. 공개시장매도·재할인율 인상은 본원통화를 직접 줄여 통화량을 감소시키는 대표적 정책수단으로 기억해 둔다.

NoteBase

문 13. 기술진보가 없는 단순한 솔로우 모형(Solow model)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노동과 자본에 대한 생산함수가 규모에 대한 수익불변(constant returns to scale)이라고 가정한다.

② 균제상태(steady state)에서 1인당 자본량과 1인당 생산량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③ 균제상태에서 총자본의 성장률은 인구증가율과 같고 총생산량의 성장률은 0이 된다.

④ 1인당 소비를 극대화하는 1인당 자본량의 균제상태 값을 자본의 황금률 수준이라 한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기술진보가 없는 단순 솔로우 모형에서 균제상태(steady state)의 성질을 정확히 이해하는지를 묻는다. 균제상태에서 1인당 변수(자본량·생산량)와 총량 변수(총자본·총생산량)의 증가율이 서로 어떻게 다른지를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핵심 개념

생산함수 $Y = F(K, L)$이 규모에 대한 수익불변(1차 동차)이면 1인당 생산함수 $y = f(k)$로 정리할 수 있다(k=1인당 자본, y=1인당 생산). 자본축적식은 $\dot{k} = sf(k) - (n + \delta)k$이며, 균제상태는 $\dot{k} = 0$이 되는 지점, 즉 1인당 투자 $sf(k)$와 1인당 자본유지에 필요한 투자 $(n + \delta)k$가 일치하는 지점이다. 균제상태에서는 1인당 자본량 k^*와 1인당 생산량 y^*가 더 이상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총자본 $K = kL$과 총생산 $Y = yL$은 인구(노동)가 매년 n의 비율로 늘어나므로, k^*와 y^*가 고정된 상태에서도 K와 Y는 모두 인구증가율 n과 같은 비율로 계속 성장한다. 즉 균제상태에서 총량의 성장률은 0이 아니라 n이다. 한편 자본의 황금률(golden rule)은 여러 균제상태 중 1인당 소비 $c^* = f(k^*) - (n + \delta)k^*$를 극대화하는 1인당 자본량 수준을 말하며, 그 조건은 자본의 한계생산이 $n + \delta$와 같아지는 지점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솔로우 모형은 노동과 자본에 대한 생산함수가 규모에 대한 수익불변이라고 가정하며, 이 가정 덕분에 총량 생산함수를 1인당 생산함수 $y = f(k)$로 바꾸어 분석할 수 있다.

② O — 균제상태에서는 1인당 자본량 k^*와 1인당 생산량 y^*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일정한 값으로 유지된다. 이것이 균제상태의 정의 자체이다.

③ X — 균제상태에서 총자본의 성장률은 인구증가율 n과 같다는 부분은 맞지만, 총생산량의 성장률이 0이 된다는 부분이 틀렸다. 1인당 생산량 y^*가 일정해도 인구(노동)가 n의 비율로 증가하므로 총생산량 $Y = y^*L$도 n의 비율로 계속 성장한다. 틀린 표현 → 올바른 표현: "총생산량의 성장률은 0이 된다" → "총생산량의 성장률도 인구증가율 n과 같다".

④ O — 여러 균제상태 중 1인당 소비를 극대화하는 1인당 자본량 수준을 자본의 황금률 수준이라고 부르며, 이는 자본의 한계생산이 $(n + \delta)$와 같아지는 지점에서 달성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1인당 변수가 균제상태에서 일정하다는 사실을 총량 변수에도 그대로 적용해 총생산량의 성장률까지 0이라고 착각하기 쉽다. 총량은 인구증가에 의해 계속 늘어난다는 점을 놓치면 ③을 옳은 설명으로 오판하게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솔로우 모형 문제에서 "균제상태"라는 단어가 나오면 먼저 어떤 변수(1인당인지 총량인지)를 묻는지부터 확인한다. 1인당 자본·생산량은 균제상태에서 일정(성장률 0)하지만, 총자본·총생산량은 인구증가율 n만큼 계속 성장한다는 두 가지를 항상 짝지어 기억한다.

암기 포인트

균제상태: 1인당 변수(k, y) 성장률 = 0, 총량 변수(K, Y) 성장률 = n(인구증가율). 자본의 황금률 = 1인당 소비를 극대화하는 1인당 자본량 수준, 조건은 자본의 한계생산 = $n + \delta$.

NoteBase

문 14. 어떤 폐쇄경제 국가의 거시경제모형이 다음과 같을 때 균형이자율을 구하면?

$C = 130 + 0.5Y_D$
$Y_D = Y - T$
$T = 0.2Y$
$I = 120 - 90r$
$G = 200$
$M_D = 25 + 0.5Y - 25r$
$M_S = 200$ (단, C는 소비, Y_D는 가처분소득, Y는 국민소득, T는 조세, I는 투자, r은 이자율, G는 정부지출, M_D는 화폐수요, M_S는 화폐공급을 나타낸다)

① 1.5%
② 2.0%
③ 2.5%
④ 3.0%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IS곡선(생산물시장 균형)과 LM곡선(화폐시장 균형)을 각각 국민소득 Y와 이자율 r에 대한 식으로 정리한 뒤 두 식을 연립하여 균형이자율을 구하는 문제이다. 소비함수에 비례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가처분소득을 통해 유발소비를 정리하는 과정이 핵심이다.

조건 정리

소비: $C = 130 + 0.5Y_D$, 가처분소득: $Y_D = Y - T$, 조세: $T = 0.2Y$이므로 $Y_D = 0.8Y$이고 $C = 130 + 0.4Y$이다. 투자: $I = 120 - 90r$, 정부지출: $G = 200$(생산물시장, IS). 화폐수요: $M_D = 25 + 0.5Y - 25r$, 화폐공급: $M_S = 200$(화폐시장, LM).

사용할 공식

생산물시장 균형: $Y = C + I + G$. 화폐시장 균형: $M_D = M_S$. 두 균형식에서 각각 Y를 r의 함수로 정리한 뒤 연립하여 균형이자율 r을 구한다.

NoteBase

계산 과정

IS: $Y = 130 + 0.4Y + 120 - 90r + 200 \rightarrow 0.6Y = 450 - 90r \rightarrow Y = 750 - 150r$.
LM: $25 + 0.5Y - 25r = 200 \rightarrow 0.5Y = 175 + 25r \rightarrow Y = 350 + 50r$.
IS=LM: $750 - 150r = 350 + 50r \rightarrow 400 = 200r \rightarrow r = 2$.
따라서 균형이자율은 2.0%이다(이때 $Y = 350 + 50 \times 2 = 450$).

선지 판단

① 1.5% → 틀린 표현. IS·LM 연립 결과인 $r = 2$와 맞지 않는다.
② 2.0% → 옳은 표현. IS곡선 $Y = 750 - 150r$과 LM곡선 $Y = 350 + 50r$을 연립하면 $r = 2.0\%$로 계산된다.
③ 2.5% → 틀린 표현. 연립 결과인 2.0%보다 크게 계산된 값으로, IS 또는 LM 정리 과정에서 계수를 잘못 적용한 경우 나올 수 있는 값이다.
④ 3.0% → 틀린 표현. 마찬가지로 IS·LM 연립 결과인 2.0%와 일치하지 않는다.

오답 포인트

가장 흔한 실수는 가처분소득 계산에서 조세를 반영하지 않고 $C = 130 + 0.5Y$로 잘못 정리하는 것이다. 반드시 $Y_D = Y - T = Y - 0.2Y = 0.8Y$를 먼저 대입해 $C = 130 + 0.4Y$로 만들어야 한다. 또한 IS식과 LM식에서 Y의 계수를 서로 다른 쪽으로 나누는 과정에서 부호나 나눗셈을 실수하면 2.0%가 아닌 다른 선지 값이 나올 수 있으므로, 계산 과정을 두 줄로 나누어 검산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비례세가 있는 폐쇄경제 IS-LM 문제는 항상 같은 순서로 접근한다. 먼저 조세식을 소비함수에 대입해 유발소비를 Y만의 식으로 만들고, 생산물시장 균형식 $Y = C + I + G$에서 Y를 r에 대한 1차식(IS)으로 정리한다. 다음으로 화폐시장 균형식 $M_D = M_S$에서 Y를 r에 대한 식(LM)으로 정리한다. 마지막으로 두 식을 연립해 r을 구하면 되므로, 시간이 부족할 때는 두 식의 Y 계수와 상수항만 정확히 뽑아내는 데 집중한다.

암기 포인트

IS: $Y = 750 - 150r$, LM: $Y = 350 + 50r$을 두 직선으로 생각하면, r이 오를수록 IS의 Y는 줄고 LM의 Y는 늘어나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는 것이 균형이자율의 의미임을 함께 기억해 둔다.

NoteBase

문 15. 소국인 A국은 쌀 시장이 전면 개방되었으나 국내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였다. 관세 부과의 경제적 효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국내수요곡선은 우하향하고 국내공급곡선은 우상향하며, 부분균형분석을 가정한다)

① 국내소비량은 감소하며, 수요가 가격탄력적일수록 감소 효과가 커진다.

② 국내생산과 생산자잉여가 증가한다.

③ 사회후생의 손실이 발생한다.

④ 수입의 감소로 국제가격이 하락하므로 국내가격은 단위당 관세보다 더 적게 상승한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소국(small country)의 수입관세 부과 효과를 부분균형모형으로 정확히 이해하는지를 묻는다. 소국은 국제시장에서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없는 가격수용자이므로, 그 나라가 수입량을 줄여도 세계시장가격(국제가격)은 변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이다.

핵심 개념

소국의 관세부과 효과: 관세부과 전 국내가격은 국제가격과 같다. 관세를 단위당 t만큼 부과하면, 소국은 세계 수요·공급에 영향을 주지 못하므로 국제가격은 그대로 유지되고 국내가격만 관세 크기만큼 정확히 상승해 국내가격 = 국제가격 + t가 된다. 가격 상승으로 국내공급량은 증가(생산자잉여 증가), 국내수요량은 감소(국내소비량 감소)하며, 그 차이인 수입량이 줄어든다. 소비자잉여 감소분 중 일부는 생산자잉여와 관세수입으로 이전되지만, 나머지는 생산 왜곡과 소비 왜곡에 따른 자중손실(사회후생 손실)로 사라진다. 대국(large country)의 경우에만 수입 감소가 세계 초과공급을 늘려 국제가격을 실제로 하락시키고, 그 결과 국내가격 상승폭이 관세액보다 작아지는 교역조건 효과가 나타난다.

선지별 해설

① O — 관세로 국내가격이 상승하면 국내수요량(소비량)이 감소한다.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클수록 동일한 가격 상승에 대한 수요량 감소폭이 커지므로, 소비 감소 효과도 커진다.

② O — 국내가격 상승으로 국내 생산자의 공급량(국내생산)이 늘어나고, 공급곡선을 따라 가격이 오른 만큼 생산자잉여도 증가한다.

③ O — 관세부과로 소비자잉여 감소분 중 관세수입과 생산자잉여 증가로 상쇄되지 않는 부분, 즉 생산 왜곡과 소비 왜곡에 따른 자중손실이 발생하여 사회 전체의 후생은 감소한다.

④ X — 소국은 세계시장 가격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가격수용자이므로 수입량이 줄어도 국제가격은 하락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된다. 국내가격은 국제가격에 관세액을 더한 만큼, 즉 단위당 관세 크기와 정확히 같은 폭으로 상승한다. 국제가격 하락과 그로 인한 국내가격 상승폭 축소는 대국의 관세부과에서 나타나는 효과이지 소국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이 문제에서 틀리기 쉬운 지점은 관세부과의 일반적 효과(대국 모형에서 배운 교역조건 개선 효과)를 소국 상황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다. 발문에 제시된 '소국'이라는 조건을 놓치면 ④를 옳은 설명으로 착각하게 된다.
부분균형분석에서 소국은 국제가격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는 가격수용자라는 전제를 반드시 먼저 확인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관세·무역 정책 효과 문제에서는 가장 먼저 '소국'인지 '대국'인지를 확인한다. 소국이면 국제가격 불변·국내가격은 관세액만큼 그대로 상승·교역조건 효과 없음으로 판단하고, 대국이면 국제가격 하락 가능·국내가격 상승폭이 관세액보다 작음·교역조건 개선 가능성까지 고려한다. 이후 국내소비량 감소, 국내생산량·생산자잉여 증가, 자중손실 발생이라는 나머지 효과는 소국·대국 모두에서 공통으로 성립한다는 점도 함께 정리해 둔다.

암기 포인트

소국 관세 효과 3가지: 국내가격 = 국제가격 + 관세액(국제가격 불변), 국내생산 증가·소비 감소, 사회후생은 항상 감소(자중손실 발생). 국제가격이 하락하고 국내가격 상승폭이 관세액보다 작아지는 효과는 대국에서만 발생한다는 점을 소국과 짝지어 구분해서 외워 둔다.

NoteBase

문 16. 단기의 완전경쟁시장에서 기업 A의 고정비용은 0이고, 평균가변비용이 AVC(q) = q^2 - 6q + 18(q: 생산량)이라 할 때 옳지 않은 것은?

① 시장가격이 6일 때 한계비용이 최소가 된다.

② 시장가격이 7이면 기업은 생산을 중단하는 편이 낫다.

③ 시장가격이 8이면 생산하는 것이 하지 않는 것보다 순손실을 줄일 수 있다.

④ 시장가격이 9일 때 기업의 경제적 이윤이 0이 된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고정비용이 0인 단기 완전경쟁기업에서 평균가변비용(AVC)과 한계비용(MC) 곡선을 도출하고, 조업중단점(가격=AVC 최소값)을 기준으로 각 가격 수준에서 생산 여부와 손익을 판단하는 문제이다. 고정비용이 0이라는 조건 때문에 생산을 중단하면 손실이 정확히 0이 된다는 점이 판단의 핵심이다.

조건 정리

고정비용(FC) = 0이다. 평균가변비용은 $AVC(q) = q^2 - 6q + 18$이다. 완전경쟁시장이므로 기업은 가격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고, 이윤극대화 조건 $P = MC$에 따라 생산량을 결정한다.

사용할 공식

총가변비용은 $TVC(q) = q \cdot AVC(q) = q^3 - 6q^2 + 18q$이고, 한계비용은 $MC(q) = \frac{dTVC}{dq} = 3q^2 - 12q + 18$이다. AVC의 최소점은 $\frac{dAVC}{dq} = 2q - 6 = 0$에서 구하고, 이 값이 바로 조업중단가격이다. 고정비용이 0이므로 경제적 이윤은 $\pi = q(P - AVC(q))$로 쓸 수 있고, 생산을 중단하면 이윤은 항상 0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AVC 최소화: $2q-6=0 \Rightarrow q=3$, $AVC(3)=9-18+18=9$. 따라서 조업중단가격은 9이고, 가격이 9 미만이면 어떤 생산량에서도 $AVC(q) \geq 9 > P$이므로 생산이 손실을 키운다.

MC 최소화: $MC(q)=3q^2-12q+18$의 도함수 $6q-12=0 \Rightarrow q=2$, $MC(2)=12-24+18=6$. 즉 한계비용은 $q=2$에서 최솟값 6을 갖는다. 가격이 6일 때 이윤극대화 생산량은 $P=MC$를 풀면 $3q^2-12q+18=6 \Rightarrow q^2-4q+4=0 \Rightarrow (q-2)^2=0 \Rightarrow q=2$이고, 이는 정확히 MC가 최소가 되는 지점과 일치한다.

가격이 7 또는 8일 때: $AVC(q)=7$을 풀면 $q^2-6q+11=0$의 판별식이 $36-44=-8<0$이라 실근이 없고, $AVC(q)=8$을 풀어도 $q^2-6q+10=0$의 판별식은 $36-40=-4<0$이라 실근이 없다. 즉 AVC는 항상 최솟값 9보다 크므로, 가격이 7이든 8이든 어떤 생산량에서도 가격이 평균가변비용에 미치지 못한다. 이 경우 생산하면 매출이 가변비용조차 회수하지 못해 손실이 발생하지만, 생산을 중단하면 고정비용이 0이므로 손실은 정확히 0이 된다. 따라서 가격 7, 8에서는 생산을 중단하는 것이 손실을 0으로 만들어 더 유리하고, 생산을 하면 오히려 순손실이 커진다.

가격이 9일 때: $q=3$에서 $AVC(3)=9=P$이므로 $TR=9\times 3=27$, $TVC=27$이고 고정비용이 0이므로 $TC=27$이다. 따라서 경제적 이윤은 $27-27=0$이 된다.

선지 판단

① 시장가격이 6일 때 한계비용이 최소가 된다 → 옳다. $P=6$에서 이윤극대화 생산량은 $q=2$이고, 이 지점이 정확히 MC의 최솟값(6)이 되는 지점이므로 옳은 서술이다.
② 시장가격이 7이면 기업은 생산을 중단하는 편이 낫다 → 옳다. 가격 7은 AVC의 최솟값 9보다 낮아 어떤 생산량에서도 가변비용조차 회수하지 못하므로, 생산을 중단해 손실을 0으로 만드는 것이 유리하다.
③ 시장가격이 8이면 생산하는 것이 하지 않는 것보다 순손실을 줄일 수 있다 → 틀렸다. 가격 8도 AVC 최솟값 9보다 낮으므로 생산하면 항상 가변비용을 회수하지 못해 손실이 발생하고, 고정비용이 0이므로 생산을 중단하면 손실이 정확히 0이 된다. 따라서 생산하는 것이 오히려 순손실을 키우며, 생산을 중단하는 것이 순손실을 줄이는(즉 0으로 만드는) 방법이다. 틀린 표현 → 올바른 표현: "생산하는 것이 순손실을 줄일 수 있다" → "생산을 중단하는 것이 순손실을 0으로 줄일 수 있다".
④ 시장가격이 9일 때 기업의 경제적 이윤이 0이 된다 → 옳다. 가격 9는 AVC의 최솟값과 같은 조업중단가격으로, 이 지점에서 총수입과 총비용이 정확히 일치해 경제적 이윤이 0이 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고정비용이 0이라는 조건을 놓치면 ③에서 생산을 중단해도 손실이 발생한다고 착각하기 쉽다. 하지만 고정비용이 0이면 생산을 중단할 때 비용이 전혀 발생하지 않으므로 손실은 정확히 0이고, 이는 어떤 양(+)의 생산량에서 발생하는 손실보다 항상 작거나 같다. 또한 AVC가 8이나 7이 되는 생산량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방정식을 풀어 확인하지 않고 감으로 판단하면 오답을 고르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AVC(q)$를 미분해 최소가 되는 생산량과 그 값(조업중단가격)을 구한다. 그다음 문제에서 주어진 각 가격을 이 조업중단가격과 비교해, 가격이 그보다 낮으면 무조건 생산 중단(고정비용이 0이면 손실 0)이 유리하고, 같거나 높으면 $P = MC$로 생산량을 구해 이윤을 계산한다. MC의 최솟값을 묻는 선지는 별도로 $MC(q)$를 미분해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완전경쟁기업의 조업중단가격은 항상 AVC의 최솟값이며, 그 지점에서 MC와 AVC가 교차한다. 고정비용이 0인 경우 생산을 중단하면 손실은 정확히 0이 되므로, 가격이 AVC 최솟값보다 낮은 모든 구간에서는 생산 중단이 항상 손실을 최소화(0으로)하는 선택이다.

NoteBase

문 17. 소국인 A국에서 X재의 국내 수요함수와 공급함수는 각각 $P = 12 - Q$, $P = Q$(P: 가격, Q: 수량)이며, 세계시장에서의 X재 가격은 4이다. A국이 X재 시장을 전면 개방한 직후 국내 수요함수와 공급함수에 변화가 없다면, 개방 후 A국의 후생 변화는? (단, 후생은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의 합이다)

① 4만큼 증가

② 6만큼 증가

③ 8만큼 증가

④ 10만큼 증가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소국 개방경제에서 폐쇄경제 균형과 개방 후 균형을 각각 계산하고,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의 합인 총잉여(후생)가 개방 전후로 얼마나 변하는지를 묻는다. 소국이므로 세계가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가격수용자라는 점이 핵심이다.

조건 정리

국내 수요함수 $P = 12 - Q$, 국내 공급함수 $P = Q$, 세계시장가격 $P = 4$. 개방 후에도 수요·공급함수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사용할 공식

폐쇄경제 균형은 수요와 공급이 같아지는 점($12 - Q = Q$)에서 결정된다. 개방경제에서는 국내가격이 세계가격 $P = 4$로 고정되며, 이때의 국내수요량과 국내공급량은 각각 수요함수와 공급함수에 $P = 4$를 대입해 구한다. 소비자잉여는 수요곡선 아래에서 가격 위쪽 삼각형의 넓이, 생산자잉여는 공급곡선 위에서 가격 아래쪽 삼각형의 넓이이며, 각각 잉여=(1)/(2)×밑변×높이로 계산한다.

계산 과정

1) 폐쇄경제 균형: $12 - Q = Q$에서 $Q = 6$, $P = 6$. 이때 소비자잉여는 수요곡선의 세로절편 12에서 균형가격 6까지의 삼각형이므로 $\frac{1}{2} \times 6 \times 6 = 18$, 생산자잉여는 공급곡선이 원점을 지나므로 $\frac{1}{2} \times 6 \times 6 = 18$이다. 따라서 개방 전 총잉여는 $18 + 18 = 36$이다.
2) 개방 후 균형: 세계가격 $P = 4$로 고정된다. 국내수요량은 $Q_D = 12 - 4 = 8$, 국내공급량은 $Q_S = 4$이며 부족분 $8 - 4 = 4$만큼을 수입해서 충당한다.
3) 개방 후 소비자잉여는 수요곡선 세로절편 12에서 가격 4까지의 삼각형이므로 $\frac{1}{2} \times (12 - 4) \times 8 = 32$이다. 개방 후 생산자잉여는 공급곡선 아래 가격 4까지의 삼각형이므로 $\frac{1}{2} \times 4 \times 4 = 8$이다. 따라서 개방 후 총잉여는 $32 + 8 = 40$이다.
4) 후생 변화는 $40 - 36 = 4$만큼 증가한다.

NoteBase

선지 판단

① 4만큼 증가: 계산 결과와 일치하므로 옳다.
② 6만큼 증가: 폐쇄경제 균형거래량(6)과 착각한 값으로 총잉여 변화분과는 다르다.
③ 8만큼 증가: 개방 후 수입량(4)이나 국내수요량(8)과 혼동한 값으로 옳지 않다.
④ 10만큼 증가: 소비자잉여만의 변화분($32-18=14$)이나 다른 값과 혼동한 것으로 실제 총잉여 변화분과 다르다.

오답 포인트

소국개방 문제에서는 개방 후 국내가격이 세계가격으로 고정된다는 점을 놓치고 폐쇄경제 균형가격을 그대로 쓰면 오답이 나온다. 또한 소비자잉여만 계산하거나 생산자잉여만 계산해서 후생 변화로 착각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총잉여는 반드시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를 각각 개방 전후로 구한 뒤 그 합의 차이로 계산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소국 개방 문제가 나오면 먼저 폐쇄경제 균형(수요=공급)을 구해 개방 전 총잉여를 계산하고, 이어서 세계가격에서의 국내수요량·국내공급량을 각각 구해 개방 후 총잉여를 계산한 다음 두 값의 차이를 구하는 순서로 접근한다. 세계가격이 국내균형가격보다 낮으면 수입국이 되어 소비자잉여 증가분이 생산자잉여 감소분보다 커서 총잉여가 증가한다는 점을 함께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소국 개방경제에서 총잉여 변화 삼각형은 수입 삼각형(수입국의 경우)으로, 그 넓이는 (1)/(2)×(국내수요량-국내공급량)×(국내균형가격-세계가격)으로 바로 구할 수도 있다. 이 문제에서는 $\frac{1}{2}\times(8-4)\times(6-4)=4$로 검산된다.

NoteBase

문 18. 먼델-플레밍(Mundell-Fleming) 모형을 가정할 때 다음의 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마셜-러너 조건이 충족된다고 가정한다)

◯ A국과 B국은 소규모 개방경제하에서 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단기적으로 물가가 고정되어 있으며 자본 유출입은 자유롭다.
◯ 글로벌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A국은 국채를 통한 재정지출을 증가시키고 B국은 통화량을 증가시켰다.

① 자본이 B국에서 A국으로 이동한다.
② A국의 경상수지가 악화된다.
③ A국의 통화가 평가절상된다.
④ A국과 B국의 경기가 회복된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소규모 개방경제·변동환율제도·완전한 자본이동성(마셜-러너 조건 충족) 하에서 재정정책(A국)과 통화정책(B국)이 각각 소득·환율·경상수지에 미치는 효과가 서로 다르다는 점을 먼델-플레밍 모형으로 판단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소규모 개방경제에서 자본이동이 완전히 자유로우면 국내 이자율은 결국 세계 이자율 수준으로 수렴한다.
변동환율제에서 재정지출 확대(A국)는 IS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켜 이자율을 일시적으로 높이고 자본유입을 유발한다. 이 자본유입은 자국통화를 절상시키고, 절상은 순수출을 감소시켜 처음에 늘어난 총수요를 다시 상쇄한다. 그 결과 소득은 원래 수준으로 되돌아가며 재정정책은 사실상 무력해진다(완전한 구축효과).
변동환율제에서 통화량 확대(B국)는 LM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켜 이자율을 낮추고 자본유출을 유발한다. 자본유출은 자국통화를 절하시키고, 절하는 순수출을 증가시켜 총수요를 늘린다. 그 결과 소득이 증가하며 통화정책은 매우 효과적이다.
즉 변동환율제·완전자본이동 조합에서는 재정정책은 무력하고 통화정책은 효과적이라는 비대칭적 결과가 나타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자본이 B국에서 A국으로 이동한다: A국은 재정지출 확대로 이자율이 일시적으로 상승하고, B국은 통화량 확대로 이자율이 하락한다. 두 나라의 이자율 격차 때문에 자본은 이자율이 낮아진 B국에서 이자율이 높아진 A국으로 이동한다. 옳은 설명이다.
② A국의 경상수지가 악화된다: A국으로의 자본유입은 A국 통화에 대한 수요를 늘려 A국 통화를 절상시킨다. 통화 절상은 A국 상품의 가격경쟁력을 떨어뜨려 순수출을 감소시키므로 경상수지가 악화된다. 옳은 설명이다.
③ A국의 통화가 평가절상된다: 위와 같은 이유로 A국으로의 자본유입 증가는 A국 통화의 절상으로 이어진다. 옳은 설명이다.
④ A국과 B국의 경기가 회복된다: B국은 통화량 확대에 따른 통화 절하와 순수출 증가로 실제로 경기가 회복된다. 그러나 A국은 재정지출 확대로 늘어난 총수요가 통화 절상에 따른 순수출 감소로 완전히 상쇄되어(완전한 구축효과) 소득이 원래 수준으로 되돌아간다. 즉 A국의 경기는 회복되지 않으므로 두 나라 모두 경기가 회복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오답 포인트

변동환율제·완전 자본이동 하에서 재정정책은 통화 절상에 따른 순수출 감소로 효과가 완전히 상쇄된다는 점을 놓치면 ④번을 옳은 설명으로 오인하기 쉽다. 재정지출을 늘렸다는 사실만 보고 A국 경기도 함께 회복될 것이라 단정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은 이 조건에서 정반대의 효과(무력 vs 효과적)를 가진다는 비대칭성을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변동환율제+완전 자본이동이라는 조건이 나오면 곧바로 재정정책은 무력하고 통화정책은 매우 효과적이라는 결론부터 떠올린다. 그 다음 이자율 변화→자본이동 방향→환율 변화(절상/절하)→순수출 변화→소득 변화의 순서로 하나씩 짚어가며 각 선지를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변동환율제+완전 자본이동: 재정정책은 무력(자국통화 절상으로 순수출 감소, 완전 구축효과), 통화정책은 매우 효과적(자국통화 절하로 순수출 증가). 반대로 고정환율제에서는 재정정책이 효과적이고 통화정책이 무력하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둔다.

NoteBase

문 19. 현재 총수요와 총공급이 자연산출량(완전고용산출량)에서 균형을 이루고 있을 때 총수요 증가의 결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단기에는 생산량은 증가하고 물가는 상승한다.

② 단기에는 실질임금이 하락하고 고용은 증가한다.

③ 장기에는 총공급이 감소하여 물가는 단기보다 더 상승한다.

④ 장기에는 기대인플레이션이 낮아지고 고용이 완전고용 수준으로 감소한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총수요-총공급(AD-AS) 모형에서 완전고용 균형 상태에 있던 경제에 총수요 증가 충격이 발생했을 때, 단기와 장기에 걸쳐 산출량·물가·실질임금·고용·기대인플레이션이 어떻게 조정되는지를 순서대로 구분해 낼 수 있는지를 묻는다. 특히 장기 조정 과정에서 기대인플레이션이 상승하는 방향인지 하락하는 방향인지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핵심 개념

총수요가 증가하면 단기에는 총수요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면서 우상향하는 단기총공급곡선을 따라 산출량과 물가가 함께 상승한다. 이때 명목임금은 계약 등으로 즉시 조정되지 못해 물가 상승만큼 오르지 못하므로 실질임금(명목임금/물가)이 하락하고, 기업은 노동을 더 값싸게 고용할 수 있어 고용이 늘고 산출량이 자연산출량 이상으로 증가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근로자들이 실제로 물가가 오른 것을 인지하고 기대인플레이션을 상향 조정하여 더 높은 명목임금을 요구하게 되고, 이에 따라 단기총공급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한다. 이 조정은 실질임금과 고용이 원래 수준, 즉 완전고용 수준으로 돌아올 때까지 계속되며, 그 결과 장기에는 산출량이 다시 자연산출량으로, 고용은 완전고용 수준으로 복귀하고 물가는 단기보다 한층 더 높은 수준에서 결정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단기에는 생산량은 증가하고 물가는 상승한다. → O. 총수요 증가로 총수요곡선이 우측 이동하면 우상향하는 단기총공급곡선상에서 균형점이 이동하므로 산출량과 물가가 함께 상승한다.
② 단기에는 실질임금이 하락하고 고용은 증가한다. → O. 명목임금이 물가 상승만큼 즉시 조정되지 못하므로 실질임금이 하락하고, 노동이 상대적으로 저렴해져 기업의 고용이 늘어난다.
③ 장기에는 총공급이 감소하여 물가는 단기보다 더 상승한다. → O. 기대인플레이션 상승에 따라 단기총공급곡선이 좌측으로 이동(총공급 감소)하면서 물가가 단기 균형 수준보다 한 단계 더 오르고, 산출량은 다시 자연산출량 수준으로 되돌아간다.
④ 장기에는 기대인플레이션이 낮아지고 고용이 완전고용 수준으로 감소한다. → X. 장기 조정의 원동력은 근로자들이 실제로 벌어진 물가 상승을 반영해 기대인플레이션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높이는 데 있다. 기대인플레이션이 상승해야 명목임금 인상 요구로 이어져 단기총공급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고 산출량·고용이 완전고용 수준으로 되돌아간다. 따라서 '기대인플레이션이 낮아진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 옳은 서술: 장기에는 기대인플레이션이 높아지고(상향 조정되고) 고용이 완전고용 수준으로 감소한다.

오답 포인트

이 문항은 장기 조정의 방향을 '원래 상태로 되돌아간다'는 결과(산출량·고용의 완전고용 복귀)와 그 결과를 만들어 내는 원인(기대인플레이션의 방향)을 혼동하기 쉽게 구성되어 있다. 산출량과 고용은 장기에 원래 수준(자연산출량, 완전고용)으로 감소·복귀하지만, 그 원인이 되는 기대인플레이션은 반대로 상승한다는 점을 놓치면 ④를 옳은 서술로 착각하게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총수요 증가 문제를 보면 먼저 단기(우상향 SRAS를 따라 이동: 산출량↑, 물가↑, 실질임금↓, 고용↑)와 장기(SRAS 좌측 이동: 산출량은 자연산출량으로 복귀, 고용은 완전고용으로 복귀, 물가는 단기보다 더 상승, 기대인플레이션은 상승)를 표로 나누어 정리한 뒤, 선지에서 '결과(산출량·고용·물가)의 방향'과 '기대인플레이션의 방향'을 각각 따로 확인한다. 기대인플레이션이 낮아진다는 서술이 나오면 장기 조정 메커니즘과 모순되므로 오답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단기: 총수요 증가 → 물가↑, 산출량↑, 실질임금↓, 고용↑. 장기: 기대인플레이션↑(명목임금↑) → SRAS 좌측 이동 → 산출량·고용은 원래(자연산출량·완전고용) 수준으로 복귀, 물가는 단기보다 한층 더 상승.

NoteBase

문 20. A국은 교역의존도가 높은 경제로 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A국 통화의 가치를 단기적으로 상승시키는 사건은? (단, 모든 사건은 외생적으로 발생하였다고 가정한다)

① 국내 물가의 상승

② 수입품에 대한 국내 수요 감소

③ 해외 경기의 침체

④ 외국인 주식투자액 한도의 축소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변동환율제도에서 외환시장의 수요·공급 변화가 자국통화 가치(환율)에 미치는 방향을 판단하는 문제이다. 여기서 A국 통화 가치의 상승이란 A국 통화가 다른 통화에 비해 더 강해진다는 뜻이고, 이는 외환시장에서 외환의 수요가 줄거나 외환의 공급이 늘어날 때 나타난다. 각 선지가 외환에 대한 수요·공급 중 어느 쪽을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핵심 개념

외환에 대한 수요는 수입, 해외 자산 투자, 해외 송금 등에서 발생하고, 외환의 공급은 수출, 외국인의 국내 투자, 해외로부터의 송금 등에서 발생한다. 외환 수요가 감소하거나 외환 공급이 증가하면 외환시장에서 외환의 가치가 떨어지고 상대적으로 A국 통화의 가치는 상승한다. 반대로 외환 수요가 증가하거나 외환 공급이 감소하면 A국 통화의 가치는 하락한다. 국내 물가 상승은 구매력평가설의 논리에 따라 자국 상품의 대외 경쟁력을 떨어뜨려 수출이 줄고 수입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작용하므로 자국통화 가치를 낮추는 요인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국내 물가가 상승하면 국산품의 가격 경쟁력이 낮아져 수출이 줄고 수입이 늘어난다. 수입 증가는 외환에 대한 수요를 늘리므로 A국 통화의 가치는 오히려 하락한다.
② O: 수입품에 대한 국내 수요가 감소하면 수입이 줄어들어 외환에 대한 수요가 감소한다. 외환 수요 감소는 외환시장에서 외환 가치를 낮추고 상대적으로 A국 통화의 가치를 상승시킨다.
③ X: 해외 경기가 침체되면 해외에서 A국 상품에 대한 수요가 줄어 A국의 수출이 감소한다. 수출 감소는 외환의 공급을 줄이므로 A국 통화의 가치는 하락한다.
④ X: 외국인 주식투자액 한도가 축소되면 외국인의 국내 증권 투자를 위한 자본 유입이 줄어든다. 이는 외환 공급의 감소를 의미하므로 A국 통화의 가치는 하락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이 문제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수출 증가나 자본 유입 증가처럼 통화가치를 올리는 사건과, 수입 감소처럼 통화가치를 올리는 사건을 혼동하는 것이다. ①③④는 모두 외환 공급을 줄이거나 외환 수요를 늘려 A국 통화가치를 떨어뜨리는 사건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오직 ②만 수입 감소를 통해 외환 수요를 줄여 통화가치를 끌어올리는 사건이므로, 각 선지가 수출입과 자본이동 중 무엇에 영향을 주는지, 그 결과 외환의 수요·공급 중 어느 쪽이 움직이는지를 순서대로 따져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자국통화 가치의 상승 또는 하락을 묻는 문제가 나오면 먼저 해당 사건이 수출·수입·자본유출입 중 무엇에 영향을 주는지 파악한다. 그 다음 그것이 외환에 대한 수요를 늘리는지 줄이는지, 혹은 외환의 공급을 늘리는지 줄이는지로 바꾸어 생각한다. 외환 수요 감소 또는 외환 공급 증가는 자국통화 가치 상승으로, 외환 수요 증가 또는 외환 공급 감소는 자국통화 가치 하락으로 연결하면 헷갈리지 않는다.

암기 포인트

수출 증가·외국인 투자 유입 증가·수입 감소는 외환 공급 증가 또는 외환 수요 감소로 이어져 자국통화 가치를 올리고, 수입 증가·해외 투자 유출 증가·해외 경기 침체(수출 감소)·외국인 투자 유입 감소는 자국통화 가치를 내린다는 대응관계를 정리해 둔다.

NoteBase

문 21. (가)와 (나)에 해당하는 값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가) 갑의 재산 x에 대한 효용함수는 $u(x)=\sqrt{x}$이며, 재산은 사고가 없을 때 100원, 사고가 나면 0원이 되고, 사고가 날 가능성이 20%일 때 갑의 위험프리미엄
(나) (가)와 같은 상황에서 사고 시 보험료 지불 후의 최종 재산이 64원이 되도록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한다면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대 보험료

① (가): 8원, (나): 32원
② (가): 8원, (나): 36원
③ (가): 16원, (나): 32원
④ (가): 16원, (나): 36원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기대효용이론에서 위험프리미엄과 최대 지불용의 보험료를 계산하는 문제이다. 효용함수가 $u(x)=\sqrt{x}$로 오목하므로 갑은 위험회피자이며, 확실성등가(certainty equivalent)의 개념을 이용해 (가)의 위험프리미엄과 (나)의 최대 보험료를 순서대로 구해야 한다.

조건 정리

재산은 사고가 없으면 100원, 사고가 나면 0원이 되고 사고 확률은 20%이다. 효용함수는 $u(x)=\sqrt{x}$이다. (나)는 사고가 나더라도 보험료 지불 후 최종 재산이 64원이 되도록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할 때, 갑이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대 보험료를 구하는 것이다.

사용할 공식

기대재산 $E(x)=0.8\times100+0.2\times0$, 기대효용 $E(u)=0.8u(100)+0.2u(0)$, 확실성등가 $CE=[E(u)]^2$ (효용함수의 역함수), 위험프리미엄 $RP=E(x)-CE$. 최대 보험료는 보험 가입 후의 기대효용과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때의 기대효용이 같아지는 지점에서 결정된다.

NoteBase

계산 과정

(가) 위험프리미엄: 기대재산은 $E(x) = 0.8 \times 100 + 0.2 \times 0 = 80$원이다. 기대효용은 $E(u) = 0.8\sqrt{100} + 0.2\sqrt{0} = 0.8 \times 10 = 8$이다. 확실성등가는 $CE = 8^2 = 64$원이다. 따라서 위험프리미엄은 $RP = E(x) - CE = 80 - 64 = 16$원이다.
(나) 최대 보험료: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때의 기대효용은 위에서 구한 8이다. 문제의 보험은 사고가 나더라도 보험료 지불 후 최종 재산이 64원이 되도록 보장하므로, 사고 발생 시 효용은 $u(64) = \sqrt{64} = 8$로 고정된다. 보험료를 m이라 하면 사고가 없을 때의 재산은 $100 - m$이 되고, 가입 후 기대효용은 $0.8\sqrt{100 - m} + 0.2 \times 8$이다. 갑이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대 보험료는 가입 후 기대효용이 가입 전 기대효용 8과 같아지는 수준에서 결정되므로 $0.8\sqrt{100 - m} + 1.6 = 8$이 성립한다. 이를 정리하면 $0.8\sqrt{100 - m} = 6.4$, $\sqrt{100 - m} = 8$, $100 - m = 64$이므로 $m = 36$원이다.

선지 판단

① (가) 8원, (나) 32원 → X. (가)는 위험프리미엄 공식을 절반만 적용한 값이고 (나)도 계산이 맞지 않는다.
② (가) 8원, (나) 36원 → X. (나)는 맞지만 (가)의 위험프리미엄은 16원이므로 8원은 틀린 값이다.
③ (가) 16원, (나) 32원 → X. (가)는 맞지만 (나)의 최대 보험료는 36원이므로 32원은 틀린 값이다.
④ (가) 16원, (나) 36원 → O. 위험프리미엄 16원과 최대 보험료 36원이 모두 계산 결과와 일치한다.

오답 포인트

위험프리미엄을 기대재산에서 확실성등가를 빼는 대신 기대효용에서 확실성등가를 빼는 식으로 단위를 혼동하면 8원 같은 오답이 나온다. (나)에서는 사고 시 최종 재산 64원의 효용 $u(64) = 8$이 이미 확정되어 있다는 점을 놓치고 보험료를 다시 위험프리미엄 공식에 대입하면 32원처럼 잘못된 값을 얻게 되므로, 반드시 가입 후 기대효용 식을 새로 세워 등식을 풀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효용함수가 주어지고 사고 확률과 사고 시·사고 없을 시 재산이 주어지면, 먼저 기대재산과 기대효용을 각각 구하고 기대효용의 역함수 값으로 확실성등가를 계산한다. 위험프리미엄은 기대재산에서 확실성등가를 빼서 구하고, 보험 관련 최대 지불용의 금액은 가입 후 상태별 효용의 기대값이 가입 전 기대효용과 같아지도록 방정식을 세워서 푼다.

암기 포인트

위험프리미엄 = 기대재산 − 확실성등가, 확실성등가 = (기대효용)의 역함수 값($u(x) = \sqrt{x}$이면 $CE = [E(u)]^2$). 최대 지불용의 보험료는 '가입 후 기대효용 = 가입 전 기대효용'이 성립하는 지점에서 구한다.

NoteBase

문 22. 병은 하루 24시간을 여가시간(ℓ)과 노동시간(L)으로 나누어 사용한다. 효용은 노동을 통해 얻는 근로소득(Y)과 여가시간을 통해서만 결정된다고 할 때, 병의 노동공급곡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Y = wL$이며 w는 시간당 임금이다)

① 여가가 열등재일 경우 노동공급곡선의 후방굴절(backward bending)이 나타날 수 있다.

② 시간당 임금 상승으로 인한 대체효과는 노동공급량을 증가시킨다.

③ 여가가 정상재일 경우 시간당 임금 상승 시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더 크면 노동공급량이 증가한다.

④ 근로소득과 여가가 완전보완관계일 경우 시간당 임금 상승 시 소득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노동공급곡선은 여가와 소득 사이의 선택 문제에서 시간당 임금(w) 변화가 대체효과와 소득효과로 나뉘어 노동시간(L)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다. 하루 24시간을 여가(ℓ)와 노동(L)으로 배분하고 Y=wL로 근로소득이 정해지므로, 임금 상승은 여가의 상대가격을 높이는 가격변화이자 동시에 실질소득을 늘리는 소득변화라는 두 가지 효과를 함께 만든다. 이 문제는 그 두 효과 중 어느 것이 항상 성립하고 어느 것이 재화의 성격(정상재/열등재, 보완관계)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구분하는 능력을 확인한다.

핵심 개념

임금 상승은 여가 1시간을 포기할 때 얻는 소득(기회비용)을 높이므로, 대체효과만 떼어 보면 항상 여가를 줄이고 노동을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반면 임금 상승은 동일한 노동시간으로도 더 많은 소득을 얻게 하므로 실질소득이 늘어난 것과 같은 소득효과를 낳는데, 여가가 정상재이면 소득효과는 여가 수요를 늘려 노동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여가가 열등재이면 소득효과도 여가를 줄여 노동을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노동공급곡선의 후방굴절은 여가가 정상재이면서 임금이 높아질수록 소득효과(노동 감소)가 대체효과(노동 증가)를 압도하는 구간에서 나타난다. 완전보완관계는 두 재화를 항상 고정비율로만 소비하는 관계로, 이 경우 상대가격이 변해도 소비 비율이 바뀌지 않아 대체효과는 0이 되지만, 실질소득이 변하는 소득효과 자체는 그대로 존재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후방굴절은 임금 상승에 따른 소득효과(여가 증가, 노동 감소)가 대체효과(노동 증가)보다 커질 때 나타나는데, 이는 여가가 정상재일 때 성립하는 현상이다. 여가가 열등재이면 소득효과도 노동을 늘리는 방향(대체효과와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므로 두 효과가 상쇄되지 않고 오히려 강화되어 후방굴절이 나타날 수 없다. '여가가 열등재일 경우'라는 조건이 틀린 표현이며, 올바른 표현은 '여가가 정상재일 경우'이다.
② O: 대체효과는 재화의 정상재·열등재 여부와 무관하게 항상 성립하는 효과다. 임금이 오르면 여가의 기회비용(포기해야 하는 소득)이 커지므로, 실질소득 변화를 제외하고 상대가격 변화만 고려하면 소비자는 상대적으로 비싸진 여가를 줄이고 노동을 늘린다. 따라서 대체효과는 항상 노동공급량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③ X: 여가가 정상재일 때 임금이 상승하면 소득효과는 여가 수요를 늘려 노동공급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대체효과는 노동공급을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두 효과가 반대 방향이므로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크면 전체 효과는 노동공급 '감소'로 나타난다. '노동공급량이 증가한다'는 틀린 표현이며, 올바른 표현은 '노동공급량이 감소한다'이다.
④ X: 완전보완관계에서는 상대가격이 변해도 두 재화의 소비 비율이 고정되어 있어 대체효과가 0이 되는 것이 맞지만, 임금 상승으로 실질소득 자체가 늘어나는 소득효과는 완전보완관계와 무관하게 그대로 발생한다. '소득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틀린 표현이며, 올바른 표현은 '소득효과는 발생하지만 대체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이다.

오답 포인트

이 문항의 함정은 대체효과와 소득효과 중 어느 것이 '항상'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고 어느 것이 재화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뒤바꿔 서술하는 데 있다. 대체효과는 여가·소득의 정상재·열등재 여부와 무관하게 항상 노동공급을 늘리는 방향으로 고정되어 있다는 점을 놓치면 ①·③처럼 조건과 결론이 뒤바뀐 선지에 속기 쉽다. 또한 완전보완관계를 '효과 자체가 없다'로 확대 해석하면 ④처럼 대체효과 소멸과 소득효과 소멸을 혼동하게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노동공급 관련 선지를 보면 먼저 '대체효과'와 '소득효과'를 분리해서 각각 어느 방향인지부터 표시한다. 대체효과는 항상 노동공급 증가 방향으로 고정, 소득효과는 여가가 정상재면 노동공급 감소 방향·열등재면 노동공급 증가 방향으로 메모한 뒤, 선지가 이 방향을 그대로 서술하는지 뒤집어 서술하는지 대조하면 빠르게 정오를 판단할 수 있다. 후방굴절이 나오면 곧바로 '정상재+소득효과 우세'로 연결한다.

암기 포인트

대체효과는 항상 노동공급 증가(재화 성격과 무관), 소득효과는 여가가 정상재면 노동공급 감소·열등재면 노동공급 증가, 후방굴절은 정상재+소득효과가 대체효과를 압도할 때 발생, 완전보완관계는 대체효과만 0이고 소득효과는 그대로 존재한다는 네 가지를 짝지어 기억한다.

NoteBase

문 23. 개인 A와 B로 구성된 한 사회에서 개인의 소득이 각각 $I_A = 400$만 원, $I_B = 100$만 원이다. 개인 $i = A, B$의 효용함수가 $U_i = I_i$이고, 이 사회의 사회후생함수(SW)가 다음과 같을 때, 앳킨슨 지수(Atkinson index)를 구하면?

$SW = \min(U_A, 2U_B)$

① 0.20

② 0.25

③ 0.30

④ 0.35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롤스적 사회후생함수(최소극대화, min 형태) 아래에서 균등분배대등소득(equally distributed equivalent income)을 구하고, 이를 이용해 앳킨슨 지수를 계산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사회후생함수가 주어졌을 때 두 사람의 소득을 균등분배대등소득으로 바꿔도 동일한 사회후생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는 값이 무엇인지 찾는 절차가 핵심이다.

조건 정리

개인 A의 소득 $I_A = 400$만 원, 개인 B의 소득 $I_B = 100$만 원이다. 효용함수는 $U_i = I_i$이므로 $U_A = 400$, $U_B = 100$이다. 사회후생함수는 $SW = \min(U_A, 2U_B)$이다.

사용할 공식

실제 소득분배에서의 사회후생 수준: $SW = \min(U_A, 2U_B)$. 균등분배대등소득 I_e는 두 사람 모두에게 I_e를 나누어 주었을 때 실제 사회후생과 같은 수준을 주는 소득이다. 모두 I_e를 가지면 $U_A = U_B = I_e$이므로 $SW(I_e) = \min(I_e, 2I_e) = I_e$이다. 앳킨슨 지수는 $A = 1 - \frac{I_e}{\bar{I}}$이며, $\bar{I}$는 평균소득이다.

계산 과정

실제 사회후생: $SW = \min(U_A, 2U_B) = \min(400, 2 \times 100) = \min(400, 200) = 200$.
균등분배대등소득은 $SW(I_e) = I_e$이므로 $I_e = 200$(만 원)이다. 평균소득은 $\bar{I} = \frac{I_A + I_B}{2} = \frac{400 + 100}{2} = 250$(만 원)이다. 앳킨슨 지수는 $A = 1 - \frac{I_e}{\bar{I}} = 1 - \frac{200}{250} = 1 - 0.8 = 0.2$이다.

NoteBase

선지 판단

① 0.20: 옳다. 앞의 계산 과정대로 $A = 1 - 200/250 = 0.2$이다.
② 0.25: 틀렸다. 균등분배대등소득을 200이 아닌 다른 값(예: 평균과 실제 최소효용을 혼동한 값)으로 계산했을 때 나오는 오답이다.
③ 0.30: 틀렸다. 균등분배대등소득을 175로 잘못 산정하는 등 사회후생함수의 min 조건을 잘못 적용한 경우 나오는 오답이다.
④ 0.35: 틀렸다. 평균소득이나 균등분배대등소득 산정 과정에서 가중치를 잘못 적용했을 때 나오는 오답이다.

오답 포인트

가장 흔한 실수는 균등분배대등소득 I_e를 구할 때 $SW = \min(U_A, 2U_B)$의 우변에 있는 계수 2를 빠뜨리고 단순히 $I_e = SW$만 대입하지 않고 평균이나 다른 값을 쓰는 경우다. 사회후생함수 자체가 이미 두 효용의 min 값이므로, 이 값이 곧 균등분배 상태에서의 사회후생과 같아지는 I_e임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앳킨슨 지수 공식에서 분모는 평균소득이지 균등분배대등소득이 아니라는 점도 혼동하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사회후생함수가 min 형태로 주어지면 먼저 실제 소득분배에서의 U_A, U_B를 각각 구해 SW 값을 계산한다. 그 다음 균등분배대등소득 I_e를 사회후생함수에 대입했을 때 SW와 같아지는 값으로 구한다(대부분 $I_e = SW$ 값 자체가 된다). 마지막으로 평균소득을 구해 $A = 1 - I_e/\bar{I}$에 대입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앳킨슨 지수 $A = 1 - I_e/\bar{I}$에서 I_e는 균등분배대등소득, $\bar{I}$는 실제 평균소득이다. 사회후생함수가 $\min(\cdot)$ 형태이면 균등분배대등소득은 곧 실제 상태의 사회후생함수 값과 같다.

NoteBase

문 24. A, B, C 3인으로 구성된 사회에서 공공재에 대한 개인의 수요함수는 각각 $P_A = 40 - 2Q$, $P_B = 50 - Q$, $P_C = 60 - Q$로 주어져 있다. 공공재 생산의 한계비용이 90으로 일정할 때, 사회적으로 최적인 공급 수준에서 A가 지불해야 하는 가격을 구하면? (단, P_i는 개인 $i = A, B, C$의 공공재에 대한 한계편익, Q는 수량이다)

① 10

② 15

③ 20

④ 25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공공재는 비경합성을 가지므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공급량은 개인별 수요(한계편익)를 수평이 아니라 수직으로 합산한 사회적 한계편익곡선과 한계비용이 만나는 점에서 결정된다. 이 문항은 사회적 최적 공급량을 구한 뒤, 그 수준에서 특정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가격(린달 가격)을 계산하는 유형이다.

조건 정리

개인별 수요함수: $P_A = 40 - 2Q$, $P_B = 50 - Q$, $P_C = 60 - Q$. 공공재 생산의 한계비용 $MC = 90$(수량과 무관하게 일정). 구하는 값: 사회적 최적 공급량에서 A가 지불해야 하는 가격 P_A.

사용할 공식

공공재의 사회적 한계편익은 개인별 한계편익의 수직합이므로 P_사회=P_A+P_B+P_C이다. 사회적으로 최적인 공급 수준은 P_사회=MC를 만족하는 Q에서 결정되며, 이때 각 개인이 실제로 지불하는 가격(린달 가격)은 그 최적 Q를 각자의 수요함수에 대입한 P_i이다.

계산 과정

세 사람의 수요함수를 수직으로 합하면 P_사회=P_A+P_B+P_C=(40-2Q)+(50-Q)+(60-Q)=150-4Q 사회적 최적 조건 P_사회=MC에 대입하면 $150 - 4Q = 90$ $4Q = 60$ $Q = 15$ 이 최적 수량 $Q = 15$를 A의 수요함수에 대입하면 $P_A = 40 - 2(15) = 40 - 30 = 10$ 검산: $P_B = 50 - 15 = 35$, $P_C = 60 - 15 = 45$이며 $P_A + P_B + P_C = 10 + 35 + 45 = 90 = MC$로 일치한다.

NoteBase

선지 판단

① 10 → O. 사회적 최적 공급량 $Q = 15$에서 A의 한계편익 $P_A = 40 - 2(15) = 10$으로 계산 과정과 일치한다.
② 15 → X. 이 값은 A가 지불할 가격이 아니라 사회적 최적 공급량 Q 자체의 값이다. 수량과 가격을 혼동한 오답이다.
③ 20 → X. 개인별 수요함수를 수직합이 아닌 다른 방식(예: 단순 평균이나 잘못된 대입)으로 처리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값으로, 올바른 계산 결과가 아니다.
④ 25 → X. P_B나 P_C 계산 과정과 혼동하거나 한계비용을 잘못 배분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값으로, A의 지불 가격과는 다르다.

오답 포인트

가장 흔한 실수는 공공재의 사회적 한계편익을 사적재처럼 수평합(즉 개별 수요곡선을 각각 역함수로 바꾸어 수량을 더하는 방식)으로 구하는 것이다. 공공재는 모두가 동일한 수량 Q를 함께 소비하므로, 같은 Q에서 각자가 느끼는 한계편익(가격)을 수직으로 더해야 한다. 또한 사회적 최적 공급량 $Q = 15$와 A가 실제로 지불하는 가격 $P_A = 10$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공공재 문제에서 여러 개인의 수요함수가 주어지고 한계비용(또는 공급곡선)이 제시되면, 먼저 개인별 수요함수를 모두 더해 사회적 한계편익곡선을 구성한다. 이후 사회적 한계편익=한계비용 조건으로 최적 공급량 Q^*를 구하고, 마지막으로 이 Q^*를 묻고자 하는 개인의 수요함수에 대입해 그 개인이 부담할 가격을 계산한다.

암기 포인트

공공재의 사회적 최적 조건: 개인별 수요함수의 수직합 = 한계비용. 최적 수량을 구한 뒤 각 개인의 수요함수에 대입한 값이 그 개인의 린달 가격(부담 가격)이 된다.

NoteBase

문 25. 어느 은행의 재무상태가 다음과 같을 때, 은행의 레버리지 비율 ≤ft(총자산자기자본)은 대출이 회수 불가로 판명되기 전에 비해 몇 배가 되는가? (단, 소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최초 자기자본은 1,000만 원이고 예금으로 9,000만 원을 예치하고 있다.
◯ 예금액의 10%를 지급준비금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잔여 자산을 모두 대출하고 있다.
◯ 전체 대출 금액 중 10%가 회수 불가로 판명되었다.

① 3배
② 5배
③ 10배
④ 12배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은행의 대차대조표를 자기자본, 예금(부채), 지급준비금과 대출(자산)로 구성해 총자산과 자기자본을 각각 구한 다음, 대출 부실이 발생했을 때 그 손실이 자기자본에서 먼저 차감된다는 점을 적용해 레버리지 비율(총자산/자기자본)이 사고 전후 몇 배로 변하는지를 계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최초 자기자본은 1,000만 원이고 예금 9,000만 원을 예치받아 총자산은 자기자본과 예금의 합인 10,000만 원이다.
지급준비금은 예금액의 10%인 900만 원이고, 나머지 자산인 9,100만 원(=10,000만 원-900만 원)을 전부 대출로 운용한다.
대출 9,100만 원 중 10%인 910만 원이 회수 불가로 판명되며, 이 손실은 은행의 자기자본에서 차감된다.

사용할 공식

레버리지 비율 =총자산자기자본이며, 대출 부실로 발생한 손실만큼 총자산과 자기자본이 동시에 같은 금액만큼 줄어든다는 점(자산=부채+자본 항등식이 유지되어야 하므로, 부채인 예금은 그대로이고 자본이 손실분만큼 감소)을 이용한다.

NoteBase

계산 과정

부실 전 레버리지 비율은 $\frac{10,000}{1,000} = 10$배이다.
대출 9,100만 원 중 10%인 910만 원이 회수 불가로 판명되면 이 손실은 예금(부채)이 아니라 자기자본에서 차감된다.
부실 후 자기자본은 $1,000 - 910 = 90$만 원이 되고, 부실 후 총자산은 대출 자산이 910만 원만큼 줄어들어 $10,000 - 910 = 9,090$만 원이 된다.
부실 후 레버리지 비율은 $\frac{9,090}{90} = 101$배이다.
따라서 부실 후 레버리지 비율은 부실 전에 비해 $\frac{101}{10} = 10.1$배이며, 소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면 10배가 된다.

선지 판단

① 3배 → 틀린 표현이다. 이는 대출액(9,100만 원)을 자기자본(1,000만 원)이 아닌 다른 값으로 나누는 등 계산 과정에서 손실이 자본을 얼마나 잠식하는지를 반영하지 못한 값으로, 올바른 배수는 10배이다.
② 5배 → 틀린 표현이다. 부실 손실 910만 원을 자기자본이 아닌 예금이나 총자산 전체에서 비례 차감하는 방식으로 계산하면 나올 수 있는 값이나, 손실은 자기자본에서만 차감되므로 올바른 배수는 10배이다.
③ 10배 → 옳은 표현이다. 부실 전 레버리지 비율 10배가 부실 후 101배로 커지므로, 부실 전에 비해 정확히 10.1배이며 반올림하면 10배가 된다.
④ 12배 → 틀린 표현이다. 대출 회수 불가 비율 10%나 지급준비금 비율 10%를 다른 방식으로 잘못 적용하면 나올 수 있는 값이나, 올바른 배수는 10배이다.

오답 포인트

가장 흔한 실수는 대출 부실로 인한 손실 910만 원을 예금(부채)에서 차감하거나 총자산에서만 차감하고 자기자본은 그대로 두는 것이다. 예금은 은행이 갚아야 할 채무이므로 대출이 부실화되어도 예금자에게 지급할 의무는 그대로 남고, 그 손실은 은행 주주의 몫인 자기자본에서 흡수된다. 이 때문에 자기자본이 1,000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매우 크게 줄어들면서 레버리지 비율이 10배에서 101배로 급격히 뛰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은행 대차대조표 문제는 먼저 자산=부채+자본 항등식으로 총자산, 예금(부채), 지급준비금, 대출(자산)을 표로 정리한 뒤, 손실이 발생하면 그 손실이 부채가 아닌 자기자본에서 차감된다는 원칙을 적용해 부실 전후의 자기자본과 총자산을 각각 구하고, 마지막에 두 레버리지 비율의 비를 계산한다.

암기 포인트

레버리지 비율 =총자산자기자본이고, 자산 손실은 예금(부채)이 아니라 자기자본을 먼저 갉아먹으므로 자기자본이 작을수록(레버리지가 높을수록) 작은 손실에도 레버리지 비율이 폭등한다는 점을 기억해 둔다.

NoteBase